



저작자표시-비영리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국제지역학 석사 학위 논문

북·중 경제협력의 정치·경제적 함의에
관한 연구



2013년 2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국제지역학과

ZHANG XUAN

국제지역석사학위논문

북·중 경제협력의 정치·경제적 함의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리 단

이 논문을 국제지역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2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국제지역학과

ZHANG XUAN

ZHANG XUAN의 국제지역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3년 2월



주 심 경제학박사 서 창 배 (인)

위 원 사회학박사 예 동 근 (인)

위 원 정치학박사 리 단 (인)

< 목차 >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선행연구	2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5
제2장 북·중 경협 단계와 현황	7
제1절 북·중 경협 단계	7
1. 침체기(1992~1999년)	7
2. 조정기(2000~2006년)	10
3. 추진기(2006~현재)	12
제2절 북·중 경협 현황	15
1. 무역	15
2. 투자	21
3. 중국의 대북 지원	27
제3장 북·중 경협 정치적 함의	31
제1절 중국에 대한 함의	31
1. 동북아 전략의 필요	31
2. 한반도에서 영향력 확보	38
제2절 북한의 대한 함의	43
1. 국제사회의 대북제재현황	43
2. 북한의 국제적 고립의 탈출과 체제안전 도모	51
제4장 북·중 경협 경제적 함의	57
제1절 중국에 대한 함의	57

1. 중국의 동북3성 진흥의 필요	57
2. 두만강 하류지역 개발촉진	61
제2절 북한에 대한 함의	66
1. 경제난 완화의 필요	66
2. 북방경제특구 확대의 필요	69
제5장 결론	74
참고문헌:	77



<표 차례>

<표 1> 북·중,한중 수뇌부의 회담 현황(1987~1999)	8
<표 2> 북한의 대중 무역추이	15
<표 3>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남북교역 제외)	18
<표 4> 동북3성의 대북무역	19
<표 5> 북한의 대 중국 수출품 품목	20
<표 6> 북한의 대 중국 수입품 품목	21
<표 7> 중국의 연도별 대북투자	22
<표 8> 제조업 등 기타분야	22
<표 9> 2004-2009년 중국의 북한 광물자원 투자개발 및 채굴권 확보 현황	24
<표 10> 중국의 대북 서비스분야 투자 현황	25
<표 11> 중국의 공식적인 대북 무상원조	27
<표 12>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	28
<표 13> 유엔 안보리 결의 제1874호 대북 제재대상자 및 제재사유	45
<표 14> 일본의 대북제재종류와 내용	51

<그림 차례>

<그림 1> 2006~2011년(상반기) 북·중 무역 수지	17
<그림 2> 2003-2009년 중국의 국가별 대외 투자 흐름	26
<그림 3> 라진항의 위치	64

A Study on Political Economic Implications in North Korea and China's
Economic Cooperation

ZHANG XUAN

*Department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Since the cold war, with China's reform and opening-up and changing relationship in northeast Asia,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DPRK has changed. The economic relationship and personnel exchanges between China and DPRK were seriously weakened due to the establishment of China-South Korea diplomatic relations in 1992. Especially when Kim Il Sung died in 1994, the interactions at the top level were totally cut off between the two countries. It was Kim Yong Nam who was the president of the Presidium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visited to China in 1999 that ended the cooling-off period and the two countries' relationship returned to normal.

Entering to the 21st century, the economic relationship between two countries has been greatly enhanced. In 2006 and 2009, however, DPRK conducted the nuclear tests despite condemnation of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 opposition of China following China's voting in favor of UN's No.1874 resolution. What's worse, Cheonan incident in 2009 and shelling of Yeonpyeong Island in 2010 damaged China's strategic interests. Due to Cheonan incident, South Korea strengthened military relationship with America, which not only influenced the stability in

northeast Asia but threatened China's strategic interests.

Interestingly, although there existed great conflicts and contradictions between political relationships of the two countries, the economic corporation has never been interrupted but expanding continuously. After the State Council of China officially approved the outline of development of Chang-Ji-Tu pilot Zone in 2009, the two countries economic relations has been increasingly strengthened.

Based on the stage and current situation, this paper comprehensively analyzes implication of politics and economics between China-DPRK economic corporations.

Keyword: China-DPRK economic corporation, China-DPRK relations, policy on the Korean peninsula.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북·중 양국의 관계는 한국전쟁으로 맺어진 혈맹관계이며 냉전기에 북·중 양국은 전략적 이해와 메커니즘 및 인적 유대관계 유지 등의 요인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동맹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¹⁾ 그러나 중국의 개혁개방 및 동북아 역학관계의 변화에 따라서 양국관계도 변화되었다.

1992년의 한·중 수교로 양국관계는 약 10년 간의 냉각기를 겪게 되었지만 1999년 김영남 위원장의 방중으로 북·중 양국관계는 정상화되었다. 특히 2000년 3월 김정일 평양 주재 중국대사관 방문 및 5월의 북경방문으로써 양국관계는 밀접해지게 되었고 이러한 우호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양국 간의 경제협력이 강화되고 2006년과 2009년에 북한이 두 번의 핵실험을 하여, 특히 2009년 북한의 제2차 핵실험 강행으로 중국은 북한에 대하여 역사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대응하면서 유엔의 대북제재결의안 1874호에 동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중 경협은 급속히 발전 하였다. 2009년 8월30일 중국 국무원은 ‘장지투개발개방 선도구를 위한 중국의 두만강구역합작개발계획요강(以長吉圖爲開發開放先導區的中國圖們江區域合作開發規劃綱要)’을 국가전략으로 정식 비준하였고²⁾ 중국 동부 지역과 북한 간의 연계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이며 북·중 경제협력이 기업주도하에서 정부주도로 바뀌었다.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항구가 있고 북한도 경제난으로 인하여 중국은 북한과의 경제 협력

1) 신상진, “북·중 정치외교 관계: 실리에 기초한 전략적 협력 관계”, 『북한-중국 간 경제 사회 네트워크 형성과 변동』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 통일학세미나 자료집, 2008, pp.4-16.

2) 吉林省政府網: 長吉圖開發開放先導區特別專題
<http://www.ji.gov.cn/zt/citkfkfxdp>
(검색: 2012.7.16)

이 더 긴밀해 보여 신 북·중 경협시대의 개막이라 불려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³⁾

북·중 경협 긴밀화에 대한 평가가 양극화 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북·중 경협의 긴밀화는 북한의 시장경제 학습의 창구가 될 것이며,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는데 일조할 것이 하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일부 학자들은 북·중 경협의 긴밀화는 북한의 대중의존도를 심화시킬 것이며 중국의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강화시킬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동북4성론’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이 논문은 북·중 경협의 긴밀화 실태와 그 정치·경제적 함의를 분석하고자 한다.

제2절 선행연구

북·중 경제협력의 급속한 발전도는 연구자들의 시선을 끌게 되었다. 그 동안 북·중 경협에 대한 연구성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林今淑은 2000년 이후 북·중 무역은 북한에 대한 중국기업의 투자가 확대함에 따라 수출입규모의 증가속도가 북한 대외무역의 증가속도를 초월할 뿐만 아니라 무역규모, 상품변화, 무역형태 및 거래지역의 분포 등 많은 면에서 변화가 많이 생겨났다고 주장하였다. 林今淑교수는 이런 변화 및 변화의 원인을 분석하고 양국 무역에서 존재한 문제를 분석하는 곁에 정부와 기업 측면에서 관련된 대책을 제출했다.⁴⁾

吳德烈은 지경학적인 측면에서 북·중경협의 우세 및 양국 경협의 현황과 잠재력을 분석하여 양국경협을 진일보 발전에 대해 합리적인 대책을 제시하였다.⁵⁾

3) 조명철, “중국의 대북한 경제협력 변화와 전망”, 대외경제연구원, 2010.

4) 林今淑, “中朝貿易的現狀及對策研究”, 『延邊大學學報(社會科學版)』 第42卷 第一期, 2009.

朴建一은 역사적인 시각으로 북·중 경협이 단계가 한국전쟁 이후의 회복 및 사회주의 기초건설시기(1954~1960), 북한 전면적 사회주의 건설시기(1961~1974), 북한 주체사상화시기(1974~1989), 탈 냉전기 북·중 경협조정(1990~2008)등 4단계로 구분하였다. 朴建一교수는 2000년 북·중 정치관계가 복원부터 2008년까지 연도별 북·중 정부 간의 경제협정, 무역, 투자 등의 분야에서 발전과 성과를 분석하여 무역규모 확대, 투자주체의 전환, 변경지역 협력 강화 등으로 북·중 경협이 특징을 제시하였다.⁶⁾

赵传君·孙永은 북·중 경협이 추진이 경제층면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북·중 양국의 지역우세, 경제적인 보완성,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 및 정치안전 등의 면에서 북·중경협이 태세와 잠재력을 분석했다.⁷⁾

陈龙山은 북·중 경협이 급속한 발전에 접어들었으며 북한의 경제 및 사회생활 등의 면에서 적극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였다. 陈龙山교수는 그동안 북한이 시도한 개혁개방은 핵개발을 비롯한 이른바 “북핵문제”로 국제사회로부터 소외되었으며 국제사회에서 생존공간이 갈수록 작아졌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북·중 경협이 추진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陈龙山교수는 발전적인 시각으로 북·중 경협이 경제상에서 북한의 “조혈(造血)” 기능을 활성화하고 북한의 도시와 농촌의 시장의 활성화, 북한경제특구의 지속적인 발전, 여행산업의 추진, 북한시장의 개방도 향상과 같은 역할을 제시하였다.⁸⁾

于广义는 21세기에 들어 북·중 경협이 새로운 발전을 이루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2003년에 북·중무역이 10억 달러를 돌파하고 북·중 무역액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양국 경제관계에 양호한 발전 추세가

5) 吳德烈, “中朝經貿合作的機遇與發展思路”, 『亞非縱橫』第1期, 2008.

6) 朴健一, “承前啟後的中朝經濟合作關係”, 『亞太地區發展報告』, 中國社會科學院亞洲太平洋研究所, 2011.

7) 赵传君, 孙永, “加強中朝經貿合作的戰略思考”, 『求是學刊』, 第2期, 2006.

8) 陈龙山, “中朝經濟合作對朝鮮經濟的影響”, 『當代亞太』, 第1期, 2006.

나타났다고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이 북한의 대외 무역관계에서 중요한 지위를 점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于广义교수는 이러한 양국 간의 무역액의 확대, 제품구조의 변화, 투자의 확대와 함께 북한은 더 많은 외부자금을 유입하기 위해서 국내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于广义교수는 이것은 양국 경제의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했다고 평가하였다.⁹⁾

조명철은 북·중 경제정책 변화에 따라서 기업주도 경제에서 정부주도로 전환, 접경지역연계개발, 협력대상과 범위 확대, 북한의 특구개발 재개, 실리적인 산업투자 증대, 중국이 북한시장 선점 등 6가지 특징을 제시하고 “신 북·중 경제시대”로 정의했다.¹⁰⁾

임수호는 북·중 경제배경에 대해 중국이 대북 기초시설의 개발을 통해서 랴오닝성 ‘연해경제벨트발전계획’에 단동-신의주 연계계획, 지린성 ‘창지투선도구개발계획’에 훈춘-나선 연계개발을 시킬 목적이고, 북한이 중국의 연계개발계획을 이용하여 북방특구를 확대할 의도라고 분석했다.¹¹⁾

이정철은 북·중 교역의 세부 품목, 무역 방식별 수출입통계, 투자유치 현황을 분석하여 현재까지 북·중간 경제협력은 투자 차원이라기보다는 무역 차원에 머무르는 수준이며, 북·중관계는 양호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기존의 특수관계에서 정상국가 관계로의 전환이 진행되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¹²⁾

김주삼은 북·중 경제관계변화의 요인을 제시하고 북·중 경제가 좀 더 지켜볼 사안이지만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데 한국 정부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김주삼은 북·중 협력이 가속화되면

9) 于广义, “中朝經貿合作的現狀、問題及對策”, 『黨政幹部學刊』, 第5期, 2008.

10) 조명철, “중국의 대북한 경제협력 변화와 전망”, 대외경제연구원, 2010.

11) 임수호, “북·중 경제밀착 배경과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2010.

12) 이정철, “북·중 경제협력관계의 변화: 현황과 함의”, 『중국이슈리포트』, 삼성경제연구소, 2006.

될수록 한반도평화통일에는 부정적인 효과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¹³⁾

양운철은 중국의 북한에 대한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북한이 국제적으로 고립된 가운데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한국의 대북투자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시점에서 중국기업의 적극적 대북한 투자는 권장할 일이며, 중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은 북한의 국제분업과 시장의 원리를 학습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¹⁴⁾

요컨대 현재까지 이루어진 연구는 북·중경협이 우세, 잠재력, 추진방안, 대책 등을 제시하거나 북·중 경협이 단계별 구분, 특징에 착안점을 두고 북한이 대 중국 경제의존도 심화가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 등 면에서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기존 연구들은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항목을 통하여 양국관계를 미시적인 관점에서 연구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북·중 경협에 대한 정치·경제 함의를 본격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북·중 경협에 대한 정치·경제적인 함의를 정리해 볼 것이다.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서술적 분석을 하였다. 중국과 한국에서 북·중 경협에 관련한 논문과 연구보고서, 정부간행물, 신문기사, 인터넷 자료, 세미나자료 등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분석·활용하였고 종적, 횡적 분석을 통한 결론을 도출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 그리고 연구방법을 밝힐 것이다.

13) 김주삼, “북·중 경제협력관계 변화와 한반도 통일환경 분석”, 동북아연구, 2011.

14) 양운철, “중국의 대북한 경제협력 증가의 정치경제적 함의”, 『정세와 정책』 세종연구소, 2006.

제2장에서는 북·중경협역 역사적 구분과 무역, 투자, 중국의 대북지원을 중심으로 북·중 경협역 현황을 살펴볼 것이다. 제3장에서는 북·중 경협역의 긴밀화가 중국에 주는 의미를 분석할 것이며, 제4장은 정치적·경제적 측면에서 북·중 경협역의 긴밀화가 북한에 주는 의미를 분석할 것이다. 제5장에서는 요약으로 결론을 내릴 것이다.



제2장 북·중 경협 의 단계와 현황

제1절 북·중 경협 의 단계

탈냉전기 북·중간에 경협단계는 침체기, 조정기, 추진기 등 3단계로 나눌 수 있다.¹⁵⁾

1. 침체기(1992~1999년)

탈냉전기에 들어 90년대 초 구소련이 붕괴하고 북한과 소련의 경제·무역 관계가 단절됨에 따라 북한의 대내외 경제는 최악으로 전락하였다. 대내적으로는 전반적인 산업생산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게다가 1990년대 중반의 자연재해까지 겹치면서 경제는 과탄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대외적으로는 핵문제로 인해 북한의 국제사회환경은 악화되었고 사회주의권 국가를 대체할 교역상대국 확보의 실패 등에 직면하게 되었다.

북·중 관계에도 역시 동유럽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연쇄적인 붕괴와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이 본격화 되면서 점차 변화가 발생하였다. 중국은 1992년에 한국과의 수교가 이루어졌다. 1992년 4월 중국은 양상쿤(楊尙昆) 주석의 김일성 주석 80세 생일 축하행사에 참석할 때 평양방문을 통해서 한중수교의 사실을 통보했다. 양상쿤 주석은 “국제정세와 대외관계 분석”을 통해 한중수교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고 “북한의 통일사업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김일성은 한반도의 미묘한 시기를 언급하면서 중국이 한중관계와 북미관계를 조화시켜 처리하기를 바라고

15) 전병근, “冷戰結束後中國的韓半島政策”, 중국연구 제44권, 2008; 최수영, “북·중경제 관계와 남북경협 의 대북 파급효과 비교분석”, 『KINU연구총서 10-13』, 통일연구원, 제 12호 2010; 왕유리, “탈냉전기 북·중 경제협력 정책 조정 에 대한 연구- 본격추진기 경협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국제학과 석사학위논문, 2011; 이상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함.

중국이 좀 더 생각해줄 것을 요청했다. 7월 중국정부는 첸치첸(錢其琛) 외교부장의 방북을 통해 장쩌민 주석의 구두친서를 전하고 한중수교의 결정을 북한에 통보했다. 김일성은 중국의 입장을 듣고 이해를 표하며 북한이 자주적인 사회주의 건설노선을 견지할 것임을 천명했다.¹⁶⁾ 9월 노태우 한국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기 전에 북한은 “제국주의에 굴복한 일부 혁명의 변절자들의 배신 행위로 말미암아 최근 일부 국가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고 자본주의가 복귀되는 심각한 사태가 빚어졌다”고 중국을 비판한 바 있다.¹⁷⁾ 그 후 1994년에 김일성의 사망으로 양국 간의 유대가 약화되었다. 1999년 북한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 김영남의 방중까지 거의 8년 동안 양국 간 고위급 인적 교류가 가끔씩 있었는데도<표 1 참조> 불구하고 상호간의 불신이 이미 양국 사이에 뿌리 내렸다.

<표 1> 북·중, 한중 수뇌부의 회담 현황(1987~1999)

연도	북·중 회담		한중 회담		제3국 회담	비고
	북한→중국	중국→북한	한국→중국	중국→한국		
1987	김일성 주석 이근모 총리					
1988		양상쿤 국가주석				
1989	김일성 주석 (비공개방 문)	자오즈양 총서기				
1990	연형목총리	장쩌민				

16) 錢其琛, <外交十記>, 2004, pp.163-165; 왕유리, “탈냉전기 북·중 경제협력 정책 조정에 대한 연구 - 본격추진기 경험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국제학과 석사학위논문, 2011, p.10 재인용.

17) 북한연구소, 『북한총람(1983-1993)』, 서울: 북한연구소, 1994, p.290; 최수영, “북·중 경제관계와 남북경협의 대북 파급효과 비교분석”, 『KINU연구총서 10-13』, 통일연구원, 제12호, 2010, p.8 재인용.

		총서기				
1991	김일성 주석	리평총리				
1992		양상쿤 국가주석	노태우 대통령			한·중 수교(8월)
1993					김영삼· 장쩌민	
1994			김영삼 대통령	리평 총리	김영삼· 장쩌민	
1995			이홍구 총리	장쩌민 주석 차오스(喬 石)전인대 위원장		
1996					김영삼· 리평 김영삼· 장쩌민	
1997						
1998			김대중 대통령			
1999	김영남 상임위원장				김대중· 주룽(朱 鎔基)지 총리	

자료: 이종석, 『북한-중국 관계 1945~2000』 서울: 중심, 2000, p.274.

한·중 수교 이후 북·중 양국은 굴곡을 겪었다. 1993년 3월에 북한은 중국과의 조율이 없는 상황에서 NPT를 탈퇴했고 이에 따라 첫 번째 북 핵위기가 발생했다. 1995년 5월에 중국은 외교관 겸 북한노동보특과원인 한경노(韓京魯)를 골동품도둑죄로 강제출국 시켰으며, 북한은 한·중수교에 대해 보복으로 대만의 수교를 시도했다.¹⁸⁾ 결국 북한과 대만의

18) 당시, 북한은 대만이 추진한 2000년 아시안게임 신청을 지지했고, 대만은 경제력을 기초로 북한에게 핵폐기물을 수출하고, 상호 대표부를 설립하여 북한에게 양식을 제공 등의 조치가 있었다. 廖小娟, “中共與北韓的雙邊關係: 以兩次核武危機的處理檢視”, 『展

수교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런 북한의 행동은 중국이 추진해온 “하나의 중국”이란 원칙에 위배되었다. 1997년 황장엽의 망명으로 북·중 양국 간의 갈등은 심해졌다. 북한은 황장엽이 망명한 게 아니라 납치되었기 때문에 중국에게 최대한 빨리 송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중국은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의해서 황장엽의 중국내 체류를 허락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북·중 양국 간에 관계가 악화된다.

1993년에 중국은 북·중관계에 경제논리를 적용하기 시작하는 등 실리주의 정책으로 전환하고 북한에 대한 대표적인 특혜 조치인 사회주의 우호 가격제 및 구상 무역제를 폐지하고 경화결제 방식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북·중 무역 규모가 급속히 감소했다. 1993~1995년 북·중간 무역액은 각각 8.9, 6.2, 5.5억 달러로 줄어들었다.¹⁹⁾

개괄적으로 말하면 이 단계에 북·중간의 정치관계의 악화가 북·중 경제협력이 하락한 결정적인 요인이고 정치적인 불신과 상호의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경제협력이 중시를 못 받았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²⁰⁾

2. 조정기(2000~2006년)

2000년대 들어서면서 북·중 관계는 양국 간 고위급 인사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한층 수교에 따라 악화된 정치관계를 복원하고 긴밀해진 우호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경제협력이 한층 강화되었다.

2000년 3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 주재 중국대사관을 방문한 데 이어 5월에는 북경을 비밀리에 전격 방문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장쩌민(江澤民) 중국국가 주석의 회담에서 김위원장의 서울답방과 한반도

『望与探索』 第3卷 第5期 2005, pp.41-42; 전병근, “冷战结束后中国的韩半岛政策”, 중국연구 제44권, 2008, p.383 재인용.

19) 전병근, “冷战结束后中国的韩半岛政策”, 중국연구 제44권, 2008, p.383.

20) 왕유리, “탈냉전기 북·중 경제협력 정책 조정에 대한 연구- 본격추진기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국제학과 석사학위논문, 2011, p.11.

정세, 향후 5년간 북·중간 경제협력과 원조문제, 미국의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북·중간 협력강화, 북한의 개혁개방문제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²¹⁾ 중국공산당 총서기 장쩌민은 2001년 9월에 평양을 방문하여 변함없는 ‘중북우의’를 과시했고, 탕자취안(唐家璇) 외교부장은 ‘친척 돌아보기’라는 표현을 썼으며, 북한에게 식량 20만톤, 디젤유 3만톤을 무상으로 제공 하겠다고 약속했다.²²⁾ 그러나, 장쩌민 주석의 방북 이후 북·중 양국 간의 눈에 띄만한 교류협력은 없었다.

2002년에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이 중국 역내의 이익을 해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국익위주로 전환하게 되었다. 중국은 경제 발전을 촉진시키는 목표와 국내정치의 안전을 위하여 남북한 간의 전략적 “등거리 외교(等距離外交)” 정책을 취하고 실리를 추구하고 있었다.

2003년 전국인대위원장 (全國人大委員長) 우방궈(吳邦國)이 방북할 때 중국 新정부는 대북 ‘전통 계승, 미래 지향, 선린우호, 협력 강화’의 정치적인 협력의도를 표현하면서 북·중 간 경협을 추진시키는 뜻을 표했다.²³⁾

2004년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는 중국을 다시 방문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경제·무역협력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중국 정부는 중국기업이 북한 측과 다양한 형태의 호혜협력을 행할 것을 적극 장려한다”고 천명하며 북한의 동의를 얻었으며 6월에 변경협력협정을 체결했다. 2005년에 들어 우이(吳儀) 부총리가 방북했을 때 대안우의유리공장이 북·중우호협작의 또 하나의 상징이고 양국이 경협을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정세에서 우호후리, 공동발전 원칙으로 새로운 협력 영역과 방식을 모색하고 중국이 북한의 자원개발과 인프라 건설에 참여하려고 한다고 했다.²⁴⁾

21) 『경향신문』, 2001년 1월 16일자.

22) KOTRA, “북-중 경제관계 현황과 전망”, 2005, p.6.

23) 왕유리. “탈냉전기 북-중 경제협력 정책 조정에 대한 연구 - 본격추진기 경협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국제학과 석사학위논문, 2011, p.13.

24) 新華網: 吳儀會見朝鮮內閣總理樸鳳柱.

http://news.xinhuanet.com/world/2005-10/08/content_3595458.htm

같은 해 10월 28일에 중국 국가주석 후진타오(胡錦濤)는 북한에 대한 공식방문에서의 김정일과의 회담에서 양당, 양국 관계의 진일보 발전에 대해 첫째, 밀접한 고위층 교류를 계속하고 상호소통 강화, 둘째, 교류분야를 확산하고 협력내용을 풍부, 셋째, 경제무역 업무를 추진하고 공동 발전을 촉진, 넷째,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협력하여 공동의 이익을 옹호 등 4가지 건의를 제시했다. 김정일은 이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 국제 정세에 어떤 변화가 생기더라도 북한 측은 전략적 입장에서 북·중 관계를 지켜나갈 것이며, 북·중 우의를 확고부동한 전략방침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²⁵⁾ 이와 같이 북·중관계가 회복됨에 따라 양국 최고지도부의 상호방문이 이루어졌으며, 북·중 무역은 1999년을 기점으로 상승 추세로 바뀌어 2003년에 10억 달러를 돌파하였고 2005년까지 북·중 무역규모가 15억 달러를 넘었다. 중국의 대북 에너지 및 자원 개발 투자를 비롯하여 양국 간의 경협이 점차 확대되었다. 그런데, 양국은 경협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일치하지만 경협 확대방식을 계속 모색하고 있다. 또 중국의 대북 교역 및 투자확대는 중국정부의 정책적 의지보다는 민간 기업들의 경제이익추구 동기에 의해 이루어졌다.²⁶⁾

3. 추진기(2006~현재)

2006년에 북한은 중국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북한이 미국과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도는 한국정부를 소외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사실 중국에 대한 강한 불신이 속에 숨어 있다. 2007년 3월 김계관 부외장이 뉴욕에서 중국

(검색: 2012.10.26)

25) 網易: 胡錦濤2005年10月28日訪問朝鮮.

<http://news.163.com/09/1004/21/5KQH5LBU00013Q8B.html>

(검색: 2012.11.23)

26) 이영훈, “북·중무역의 현황과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2006.

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발언,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에서 베트남 모델의 발전전략에 대한 의도적 언급 등의 행동은 북한의 중국에 대한 불만의 표출이었다.²⁷⁾

북핵실험에 대해서 중국 외교부성명에서 “제멋대로(悍然)” 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북한의 행동을 강력하게 비판했으며²⁸⁾ 2009년 북한이 제2차 핵실험을 단행하고 중국은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1874호에 찬성하였다.²⁹⁾

2009년 천안함과 2010년의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인하여 중국의 역내 전략 이익에 손해를 초래했다. 한중관계에 있어서 천안함 사건을 통해 수교 18년만에 처음으로 중국에게 남북한 사이에서 선택을 하도록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결국은 중국이 이전에 실시하던 “등거리”외교가 아닌 북한의 편에 더 가까이 섰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야기 시키게 되었던 것이다. 이는 한중관계와 중미관계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또한,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인해 한미군사연합훈련이 강화되고 동북아지역 안보 상황을 긴장시켜 중국의 전략적인 이익을 위협한다고³⁰⁾ 북한에 대하여 말썽을 일으키는 자(麻煩製造者)라는 말까지 나왔다.

이런 북·중 간의 정치적 불신과 갈등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경협이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강조는 이전 어느 시기보다 강해진 것으로 보였다.

2006년 1월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시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27) 왕유리, “탈냉전기 북·중 경제협력 정책 조정에 대한 연구- 본격추진기 경협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국제학과 석사학위논문, 2011, p.19.

28) 新華網: 外交部: 朝鮮悍然實施核試驗 中國政府堅決反對
http://news.xinhuanet.com/world/2006-10/09/content_5180207.htm
(검색: 2012.10.25)

29) 搜狐: 中國對1874決議投贊成票 專家稱對事不對人
<http://news.sohu.com/20090613/n264507566.shtml>
(검색: 2012.11.26)

30) 조영남, 『21세기 중국의 가는 길』 파주: 나남, 2009, p.258.

‘정부가 인도하고(政府引導), 기업이 참여하여(企業參與), 시장원리를 적용하는(市場運作)’3대 방침을 제시하였다.³¹⁾ 북·중 수교60주년을 맞아 2009년 3월에 북한 김영일 총리의 중국 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10월에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는 북한 방문을 전후로 북핵문제와 북한문제를 분리하고, 종래의 핵문제 중심의 지정학적 접근에서 벗어나 지정학적 접근을 구체화 했다. 원자바오 총리는 북한 방문에서 경제협력과 문화교류 등 양국의 협력증진과 함께, 약 2000만 달러의 지원 그리고 총 투자비용 1억5천만 달러의 신압록강대교 건설을 언급한 바 있다.³²⁾ 이를 계기로 그동안 북한의 미온적인 태도로 진전을 보지 못했던 북·중 간 대규모 경제협력사업들이 본격적으로 논의 또는 추진되기 시작했다.³³⁾

북·중 양국은 2010년에도 고위급 인사들의 상호방문 및 김정일의 중국 방문을 통해 양국 현안 및 경제협력 문제를 논의해 왔다. 2월에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대외연락부장은 방북하여, 북·중공동발전과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당 차원”에서의 협력강화를 협의한 바 있고³⁴⁾ 김계관 외무성 부장은 베이징 방문시 6차회담 복귀, 평화협정 문제와 더불어 양국 경제협력문제를 논의하였다. 이후 김영일 북한 노동당 국제부장은 라오닝성을 방문하여 양국 접경지역의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³⁵⁾

2011년은 중국의 ‘12차 5개년 경제사회 개발계획(十二五規劃³⁶⁾)’이

31) 《人民日報》, 2006년 1월 09일; 이계란, “후진타오 정부의 대북정책: 북 핵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제26권 제4호, 2010, p.158 재인용.

32) 이계란, “후진타오 정부의 대북정책: 북 핵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제26권 제4호, 2010, p.147.

33) 최수영, “북·중경제관계와 남북경협의 대북 파급효과 비교분석”, 『KINU연구총서 10-13』, 통일연구원, 제12호 2010, p.12.

34) 유현정, “북·중 정상회담과 중국의 선택” 『정세와 정책』, 세종연구소, 2010, pp.5-8; 이계란, “후진타오 정부의 대북정책: 북 핵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제26권 제4호, 2010, p.147 재인용.

35) 최수영, “북·중경제관계와 남북경협의 대북 파급효과 비교분석”, 『KINU연구총서 10-13』, 통일연구원, 제12호 2010, p.13.

36) 12차5개년의 중국 경제사회 개발계획을 말하는 것으로,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제12개 5년 계획요강”이라는 말을 줄인 것이다. 중국은 1953년부터 5년마

시작되어 ‘창지투 개발개방 선도구계획(長吉圖開發開放先導區規劃)’ 아래 중국동북부지역과 북한 간의 연계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북·중 협력이 ‘정부주도(政府主導)’ 하에 속도를 내게 되었다.

제2절 북·중 협력의 현황

1. 무역

(1) 변화 추이

북한과 중국 간의 경제협력은 무역, 투자, 중국의 대북지원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역이다. 북·중무역 규모는 1990년 48억 달러에서 1992년 7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나 이후 1990년대 말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북·중 무역은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1998년 37.1%, 그리고 1999년에도 10.3% 감소하여 1999년 북·중 무역 규모는 1974년 이후 최저수준인 3.7억 달러를 기록하였다.³⁷⁾

<표 2>북한의 대중 무역추이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수출		수입		무역총액		무역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998	57.3	-33.5	355.7	-52.9	413.0	-37.1	-298.4
1999	41.7	-27.2	328.7	-7.6	370.4	-10.3	-287.0
2000	37.2	-10.8	450.8	37.1	488.0	31.8	-413.6
2001	166.8	348.1	570.7	27.1	737.4	51.1	-403.9
2002	270.7	62.3	467.3	-18.1	738.0	0.1	-196.6

다 국가의 중·단기적인 계획을 실시한다. 첫 번째 5개년 계획은 ‘일오(一五)’라고 한다. 12차5개년 경제사회 개발계획은 2011~2015년이다.

百度百科:“十二五”规划:

<http://baike.baidu.com/view/4558628.htm?subLemmaId=4558628&fromenter=%CA%AE%B6%FE%CE%E5%BC%C6%BB%AE> (검색일: 2012.12.19)

37) 앞에 서, pp.23

2003	395.3	46.1	627.6	34.3	1,022.9	38.6	-232.2
2004	585.7	48.2	799.5	27.4	1,385.2	35.4	-213.8
2005	499.2	-14.8	1,081.2	35.2	1,580.3	14.1	-582.0
2006	467.7	-6.3	1,231.9	13.9	1,699.6	7.5	-764.2
2007	581.5	24.3	1,392.5	13.0	1,974.0	16.1	-811.0
2008	754.0	29.7	2,033.2	46.0	2,787.3	41.2	-1,278.2
2009	793.0	5.2	1,887.7	-7.2	2,680.7	-3.8	-1,094.7
2010	1,187.8	49.8	2,277.8	20.7	3,465.6	29.3	-1,089.9

자료: 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각 년도.

2000년대 들어와서 북·중 무역은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0년 양국 무역규모는 4.9억 달러로 1990년 수준을 회복하였고 2001년에는 7.4억 달러로 전년 대비 51.1%급증하였다. 2000년대 초반 북·중무역의 급증은 2000년과 2001년 북·중 정상회담을 비롯하여 양국 간 관계개선 노력이 무역에도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이다. 이런 증가추세는 2000년대 중반까지 이어져 북·중 무역규모는 2003년 10억 달러를 돌파하였고 2005년에는 15억 달러를 넘어섰다. 38)

북·중 무역은 2000년대 중반 이후에도 2008년까지 지속되었다. 2008년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무역규모가 41.2% 증가한 27.9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같은 해 북한의 대중 수입은 20.3억 달러인 반면 수출은 7.5억 달러에 불과해 사상 최대 규모인 12.8억 달러 대중 무역수지적자를 보였다. 2000년대 중후반 북·중무역의 급증은 북핵문제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본격화되고 대북지원이 감소함에 따라 북한이 식량 에너지 등 전략물자를 비롯한 수입 물자를 대부분 중국에서 조달하였기 때문이다. 39)

2009년 북·중무역은 2000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였다. 북한의 대중 수출은 전년 대비 5.2%증가하였으나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북·중무역은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3.8%감소하였다. 북한이 대중 무역에서 만성적인

38) 앞에 서, p.24.

39) 앞에 서, p.25.

대규모 적자를 시현하기 때문에 북한의 수출이 증가하더라도 수입의 감소가 더욱 큰 상황에서는 북·중무역의 감소는 불가피하다. 그렇지만 2009년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 교역량 급감을 고려한다면 북·중 무역은 북한체제의 폐쇄성 및 북·중 교역구조의 특수성으로 인해 금융위기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었다.⁴⁰⁾

북·중무역이 증가하면서 2000년대에 들어와서 특히 2000년대 중반이후 북한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는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다. 북한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2000년~2001년 4억 달러 수준에서 2002년~2004년에는 2억 달러 내외로 축소되었다.⁴¹⁾ 그러나 2005년부터 다시 확대되기 시작해 2010년에 적자액은 10억8,995만 달러로 최근 5년래 다음으로 최대이고 2011년 상반기 북한의 대중 무역 적자액은 3억9,542만 달러로 전년 상반기에 비해 적자폭이 1억9,590만 달러 축소했다.

<그림 1> 2006~2011년(상반기) 북·중 무역 수지
(단위: 천 달러)



자료: 2011년 남북교역·북·중교역 동향 비교, 한국무역협회, 2011, 8월 p.21.

40) KOTRA, 『2009북한의 대외무역동향』 서울: KOTRA, 2010, pp.20: 앞에 서, p.25 재 인용.

41) 앞에 서, p.25.

북한의 대외무역과 북·중무역이 감소추세에 있었던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는 20%대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와 북·중 교역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북한의 대중무역의존도 급격히 심화되고 있다.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는 2001년 30%, 2003년 42.8%, 2004년 48.5%, 2005년 52.6%, 2006년 56.7%, 2007년 67.1%, 2008년 73.0%, 2009년 78.5%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83.0%로 역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다.⁴²⁾

<표 3>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남북교역 제외)

(단위: %)

연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비중 (%)	25.0	24.7	32.5	32.7	42.8	48.5	52.6	56.7	67.1	73.0	78.5	83.0

자료: 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각 년도.

이러한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 심화는 일차적으로 양국 간 교역여건이 유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중국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품을 낮은 물류비로 들여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북한은 정치적인 우방인 중국으로부터 원유 등과 같은 전략물자 및 원자재 등 주요 수입물품을 조달해 왔다. 그러나 2000년대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 심화에는 한반도 특히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국제환경의 변화가 크게 작용하였다.⁴³⁾

2002년 북한이 핵개발을 시인함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북 통상제재가 강화되고 국제기구 등을 통한 대북 원조는 감소하였고 일본인 납치자 문제 등으로 인한 북 일 관계 악화로 북 일 무역도 감소하였다. 특히 북한

42) 이평규, “대북제재의 전개과정과 효과성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2011, p.171.

43) 최수영, “북·중경제관계와 남북경협에 대한 대북 파급효과 비교분석”, 통일연구원, 제12호 2010, p.26.

이 미사일 발사 및 1차 핵실험을 단행한 2006년부터는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가 본격화되었고 일본과의 교역은 단절상태에 이르렀다 이런 대외 환경 하에서 북한의 대중 경제의 존의 확대는 불가피한 실정이었다. 최근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인한 남북 교역의 위축과 경제협력사업의 부진으로 인해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는 더욱 심화된 측면이 있다.⁴⁴⁾

또한 북한의 대중 무역은 주로 동북 3성에 집중되어 있다. 북·중 무역에서 동북 3성은 70%에 육박하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리적으로 북한과 접하고 있는 동북 3성은 북·중무역의 여러 유형 중에서 변경무역과 보세무역의 이점을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0년 상반기 동북3성과 북한의 무역규모는 8억7,243만 달러를 기록해 전체 북·중무역의 67.8%를 점하고 있다. 북·중 무역에서 점하는 비중은 2005년 65.4%에서 2008년에는 75.6%까지 올라갔다. 2010년 상반기의 수치는 2008년에 비해 다소 하락된 수준을 보인 것이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는 것이다. 2010년 상반기 동북3성의 대북수출이 전체 중국의 대북수출에서 점하는 비중은 69.9%, 대북수입은 62.0%를 기록했다.⁴⁵⁾

<표 4> 동북3성의 대북무역

(단위: 천 달러, %)

		2006	2007	2008	2009 상반기	2010 상반기
랴오닝 성	수출	369,153	499,461	639,061	311,227	363,416
	수입	206,453	260,338	343,215	181,559	163,771
	수출입	575,606	759,799	982,276	492,786	527,187
길림성	수출	109,933	153,972	425,154	97,223	82,924
	수입	126,331	116,675	194,207	34,975	51,737
	수출입	236,294	270,647	619,361	132,198	134,661

44) 윤병수·동애경, “북·중 경제협력의 심화가 남북경협에 미치는 파급영향과 시사점.” 『금융연구시리즈』 제3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10.3.26, p.11; KOTRA, 『2009북한의 대외무역동향』, p.21; 앞에서 p.27 재인용.

45) 앞에서, p.30.

헤이룽 강성	수출	298,560	329,402	503,563	141,408	210,507
	수입	1,872	469	1,127	1,742	78
	수출입	300,432	329,871	504,690	143,150	210,585
동북3성 합계	수출	777,646 (63.1)	982,835 (70.6)	1,567,7 78(77.1)	549,858 (73.3)	656,847 (69.9)
	수입	334,686 (71.6)	377,482 (64.9)	538,549 (71.4)	218,276 (62.0)	215,586 (62.0)
	수출입	1,112,3 32(65.4)	1,360,3 17(68.9)	2,106,3 27(75.6)	768,134 (69.7)	872,433 (67.8)

자료: 무역협회, 'KOTIS 무역통계', kita.net

주: ()는 북·중무역에서 동북3성이 점하는 비중.

(2) 상품의 구조

북한의 대중국 주요 수출품이 주로 광물성연료·에너지, 광·슬랙 및 어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5>에서 볼 수 있듯이 광물성연료·에너지 수출액은 전년대비 51.8% 증가한 3.9억 달러를 기록하며, 2009년에 이어 2년연속 최대 수출품목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무연탄(HS270111)은 동 품목의 대 중국 수출 중 98%를 차지하였다. 지난 해 대중 수출품목 2위였던 광·슬랙 및 어류는 전년대비 79.1% 증가한 2억5,1168만 달러를 기록하며 의류(편물제 제외) 수출액은 전년대비 72.2% 증가하였다. 그리고 전기기기·TV·VTR류, 의류(편물제)가 대폭 증가하며 새롭게 10대 수출품목에 진입하였다. 주의해야 될 것은 이 10대 품목의 비중이 전체 대중수출의 93.9%를 차지하여 극히 편중된 수출 구조를 보여줬다는 것이다.

<표 5> 북한의 대 중국 수출품 품목

(단위: 천 달러, %)

HS	품목	2009	2010	증감률
27	광물성연료, 에너지	261,426	396,849	51.8%
26	광, 슬랙, 어류	140,249	251,168	79.1%
62	의류(편물제 제외)	93,260	160,577	72.2%
72	철강	72,598	108,520	49.5%
03	어패류	57,538	59,530	3.5%

79	아연과 그 제품	20,162	47,693	136.5%
25	토석류·소금	28,898	30,816	6.6%
61	의류(편물제)	8,806	25,840	193.4%
85	전기기기·TV·VTR	8,710	20,924	140.2%
28	무기화합물	16,224	13,816	-14.8%

자료: China Customs, WTA

북한의 대중국은 주요 수입품이 주요 광물성연료·에너지, 보일러·기계류, 전기기기·TV·VTR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표6>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광물성연료·에너지 수입액은 전년대비 46.4% 증가하고, 보일러·기계류, 전기기기·TV·VTR는 각 53.2%,44.7% 증가하여 인조 스테이플섬유, 철강제품이 신규로 10대 수입품목에 진입하였다.

<표 6> 북한의 대 중국 수입품 품목

(단위: 천 달러, %)

HS	품목	2009	2010	증감률
27	광물성연료, 에너지	327,078	478,778	46.4%
84	보일러, 기계류	160,094	245,192	53.2%
85	전기기기·TV·VTR	131,820	190,691	44.7%
87	일반차량	103,073	159,784	55.0%
39	플라스틱과 그 제품	74,692	84,422	13.0%
54	인조필라멘트섬유	67,272	79,359	18.0%
72	철강	68,045	70,922	4.2%
10	곡물	55,461	59,794	7.8%
55	인조스테이플섬유	33,982	54,623	60.7%
73	철강제품	50,747	52,125	2.7%

자료: China Customs, WTA

2. 투자

중국의 대북투자는 2000년대 들어와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공식적인 대북투자는 2003년 이전만 하더라도 많아야 겨우 100만 달러를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에서 공장·기업소의 독립채산제가 확립되고 시장화가 진행되면서 2004년부터 중국의 대북투자는 증가하고 처음으로 1,000만 달러를 상회하여 투자영역도 확대되었다. 2008년에 4,123만 달러로 최고 수치를 기록하여 2009년에는 586만 달러를 투자했다.⁴⁶⁾<표7 참조>

<표 7> 중국의 연도별 대북투자

(단위: 백만 달러)

년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금액	1.12	14.13	6.5	11.06	18.4	41.23	5.86

자료: 이원경, “최근 중국의 대북 투자 현황”, 『KDI 북한경제리뷰』
한국개발연구원, 2011년 3월호.

중국은 대북투자의 초기 단계에서 컴퓨터, 전기기구, 차전거, 담배 등의 제조업 분야에 우선 진출하였다<표8 참조>. 2004년부터는 점차 서비스, 자원개발<표9 참조> 및 인프라 구축 등으로 대북투자의 영역을 다변화시켜 나가고 있다. 서비스분야에 진출한 대표적인 대북투자 사례로는 2005년 6월에 개설된 북한의 보통강수입물자교류시장의 운영을 들 수 있다<표10 참조>.

<표 8> 제조업 등 기타분야

설립년도	투자회사명	투자당사자	방식	생산품 (특기사항)
2004.5	조선영초 건재품합 영회사	중국: 장춘영초과기책임유한 공사길림성방직품진출구공사 북한: 건설건재공업성 건재 무역회사	합영 (50:50)	석면스레트 (돌숨지봉판)

46) 이원경, “최근 중국의 대북 투자 현황”, 『KDI 북한경제리뷰』, 한국개발연구원, 2011년 3월호, p.45.

2004.6	조선올림 운수합영 회사	중국: 낙칭성금패속서비스유 한공사 북한: 조선올림회사	합영	국제여객서 비스은행<중 국 온주 상인 투자>
2004.6	영광가구 합영회사	중국: 길림성 중상무역대외 수출입총회사 북한: 건설건재공업성 대외 경제협조국	합영	각종 고급가구<영 광가구건재 종합센터 개업: 2000.6>
2005.10	평양전기 기구합영 회사	중국: 베이징북성효정전자과 학기술주식회사 북한: 카드식적산전력계조립 공장	합영	카드식적산 전력계
2005.10	평진자전 거 합영회사	중국: 친진디지털무역책임유 한공사 북한: 조선대외경제협력추진 위원회	합영 (51:49)	자전거
2006.4	조선은풍 합영회사	중국: 요령성 화풍목업주식 유한회사 북한: 조선은과산무역회사	합영 (55:45)	사료첨가제(복합영양첨 가제)
2008.3	평양아명 조명 합영회사	중국: 상해아명전등공장유한 공사 북한: 평양조명기구공장	합영	콤팩트 등(절전형 등 생산)
2008.4	평양백산 연초유한 책임회사	중국: 길림성담배공업유한회 사 북한: 조선연초수출입상사	합영 (51:49)	담배생산

자료: 배종렬, “북한의 외국인투자 실태와 평가·EU와 중국 기업의 대북 진출을 중심으로”, 「수은북한경제」, 2008년 가을호.

주: 실제 조업이 확인된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

<표 9> 2004-2009년 중국의 북한 광물자원 투자개발 및 채굴권 확보 현황

지역	광산	체결시기	종류	투자금액	
함경북도	온성군	강안탄광	2005.7	갈탄	
	회령시	오룡광산	2006.5	철	3.16억 위안(543억원)
	무산군	무산광산	2006.11	철	1억위안(172억원)
함경남도	덕성군	덕성광산	2004.3	철	1억달러 (1,165억원)
	장진군	장진광산	2004.5	몰리브덴	240만 유로(20억원)
	허천군	상농광산	2004.8	금, 동	
양강도	보천군	보천탄광	2006.9	금	2,000만 위안(344억원)
	혜산시	혜산청년광산	2008.11	동	4,400만 위안(756억원)
	갑산군	8월광산	2006.9	동	1,000만 위안(17억원)
		문락평광산	2006.4	철	1억 위안(172억원)
평안북도	의주군	덕현광산	2007.3	철	6억위안 (1,032억원)
	구장군	룡등탄광	2005.10	무연탄	
		룡문탄광	2005.10	무연탄	
	의주군	덕현탄광	2007.3	철	
신천군	신천탄광	2006.4	금, 은		
평안남도	순천시	2.8직동청년 탄광	2005.4	무연탄	
	은산군	천성청년탄광	2005.4	무연탄	
	상촌군	룡흥탄광	2007.9	몰리브덴	443만 달러(51억원)
황해남도	용진군	용진광산	2008.6	철	3,000만 유로(516억원)
황해북도	은파군	은파광산	2006.3	연, 아연	3.5억 위안(602억원)
	수안군	수안광산	2007.1	금	

자료: 이원경, “최근 중국의 대북 투자 현황”, 『KDI 북한경제리뷰』, 한국개발연구원, 2011년 3월호.

주: 투자금액이 확인된 프로젝트만, 원화는 체결당시의 환율로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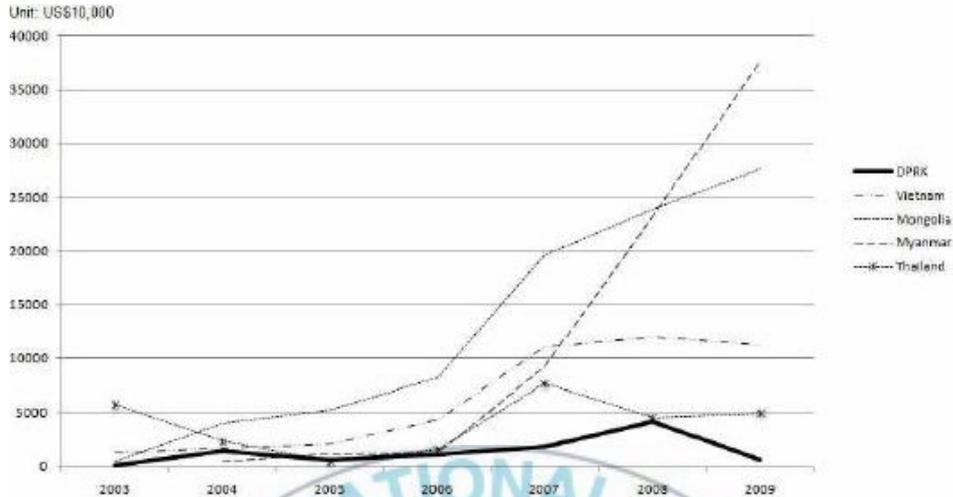
<표 10> 중국의 대북 서비스분야 투자 현황

진출년도	관심회사	주요내용	비고
2004.6	조선올림픽운수 합영회사	중국 낙청성금쾌속서비스유 한공사와 북한의 선올림픽회사간의 국제여객버스운행(중국 온주 상인 투자)	합영
2005.4	절강성의 동양국호무역유한회사	조선칠명무역회사와 절강상품판매시장(형양 제1백화점 3개층 총면적15,000평방미터)의 공동운영	생활잡화와 의류 등 판매(심야 중옥집단 투자방기후 진출)
2005.6	요령대성국제무역유한 회사, 단동환구실업발전수출 입유한회사 등 4개사	무역성 산하 중앙수출입물자교류총 회사와 보통강수입물자교류시 장 공동운영	수입물자판매(100만 달러 투자)

자료: 배종렬, “북한의 외국인투자 실태와 평가·EU와 중국 기업의 대북진출을 중심으로”, 『수은북한경제』, 2008년 가을호.

이밖에도 서비스 분야에서 중국은 평양의 백화점 운영을 위해 경영권 확보에 나선 바 있고 북한 관광산업에 대한 진출도 본격화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의 대북 투자 프로젝트는 중국의 인접국가에 대한 투자와 비교했을 때 규모도 작고 성공적이지 않다.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중국의 대북투자는 9,830만 달러였지만, 대한민국투자는 12억 달러, 대태국투자는 2억7,300만 달러, 대베트남투자는 4억3,700만 달러, 대미얀마투자는 7억2,980만 달러, 대몽골투자는 8억9,070만 달러였다(그림2 참조). 중국 투자자들은 대북 투자에 있어서 지대추구, 부족한 인프라, 억압적인 정치환경 등의 문제가 특히 대북투자를 어렵게 한다고 전하고 있다.⁴⁷⁾

<그림 2> 2003-2009년 중국의 국가별 대외 투자 흐름



자료: 이원경, “최근 중국의 대북 투자 현황”, 『KDI 북한경제리뷰』 한국개발연구원, 2011년 3월호.

중국의 상위 100개 기업 가운데 대북투자 기업은 단지 두 개 기업뿐인데, 이 두 기업 모두 제철업체이다. 투자 기업 가운데는 난징판다(NanJing Panda), 차이나 민메탈스(China Minmetals), 완샹(Wanxiang)과 같이 브랜드 인지도가 있는 대규모 기업들도 있지만, 중국의 대북투자 기업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이다. 또한 이들 대북투자자 중 대부분은 중앙정부에 의해 통제되는 국영기업이 아니라 개인회사 및 성, 주, 시에서 운영하는 기업이다. 합법적인 투자자라고 인식되는 138개 기업 중 4개의 기업만이 중앙정부에서 의해 운영되고 있다. 1997년부터 2010년 4월까지 138개의 합작기업이 설립되었고, 이중 41%는 채취산업, 38%는 경공업, 13%는 서비스 그리고 8%는 중공업분야에 대한 투자형태로 나타났다.⁴⁸⁾

최근 중국의 대북투자 패턴에서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중국의 동북

47) 이원경, “최근 중국의 대북 투자 현황”, 『KDI 북한경제리뷰』, 한국개발연구원, 2011년 3월호, p.45.

48) 앞에 논문, p.46.

진흥계획이 북·중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을 확대하고 재정투자가 증대되면서 대북 인프라 투자가 가속화되고 있다.⁴⁹⁾

3. 중국의 대북 지원

탈냉전기에 중국이 지속적으로 북한에게 중요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해 왔다. 중국의 대북지원의 정확한 통계는 아직까지 파악하기 어려우며 북한정권의 안정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경제와 전략적인 지원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 할 수 있다. 중국의 해관통계에 포함된 공식적인 대북 무상지원액(대북 무상원조는 대북 수출에 포함)은 상당한 기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공식적인 대북 무상원조는 2001년 6,910만 달러를 정점으로 이후 3년(2002-2004)간은 1000만 달러를 상회하는 정도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중국의 대북 수출에서 차지하는 무상원조의 비중은 2001년 12.1%에서 2003년과 2004년에는 각각 1.7%, 1.8% 수준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2005년 대북 무상원조는 3,810만 달러로 늘어나 대북 수출에서의 비중은 3.5%로 다소 높아졌다. 2006년에는 2005년과 비슷한 수준의 무상원조를 유지했으나 대북 수출 증가로 인해 그 비중은 3.0%로 다소 낮아졌다.<표11 참조>

<표 11> 중국의 공식적인 대북 무상원조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대북수출(A)	328.7	450.8	571.6	467.3	627.6	799.5	1081.2	1231.9
무상원조(B)	48.4	27.6	69.1	16.0	10.9	14.6	38.1	37.4

49) 윤병수·동애경, “북·중 경제협력의 심화가 남북경협에 미치는 파급영향과 시사점”, 『금융연구시리즈』 제3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10.3.26, p.22.

비중 (B/A)	14.7	6.1	12.1	3.4	1.7	1.8	3.5	3.0
-------------	------	-----	------	-----	-----	-----	-----	-----

자료: 중국해관총서 통계사

세계식량계획(WEP)의 “국제 식량원조 정보시스템(INTERFAIS)” 데이터베이스에 의해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한국과 함께 북한에 대한 최대 식량 지원국이다. 1996년부터 2007년까지 중국은 북한정부에 직접 곡물환산치 312만 톤에 해당하는 식량을 지원하였다. 이 수치는 1995년-2008년 기간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 1,167만 톤의 26.7%에 해당한다.<표12 참조> 이 기간 한국도 북한에 324만 톤의 식량을 제공하였다. 2008년 중국의 직접적인 대북 식량지원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급감한 것으로 보인다.⁵⁰⁾

<표 12>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

(단위: 톤)

연도	한국	미국	중국	일본	EU	국제사회 합계
1995	150,000	-	-	378,000	-	544,397
1996	3,401	23,379	100,000	138,574	-	498,907
1997	62,393	194,941	150,000	791	199,720	856,738
1998	54,056	241,521	153,351	67,000	87,570	763,934
1999	12,110	595,374	207,103	-	57,364	981,293
2000	351,087	333,848	291,349	99,999	57,000	1,193,234
2001	198,000	301,185	435,148	500,000	10,221	1,469,832
2002	457,800	187,099	310,696	-	9,000	1,095,054
2003	542,191	23,421	214,424	-	69,185	913,822
2004	406,510	81,395	158,722	71,743	1,853	822,423
2005	492,743	16,800	531,416	48,084	2,655	1,153,507
2006	79,500	-	257,991	-	-	353,573
2007	421,040	-	312,231	-	1,614	754,802

50)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2010년2월 국회에서 중국은 2009년에 30만 톤의 식량을 유무상으로 북한에 지원했다고 보고하였다. 『연합뉴스』, 2010년 2월 23일; 최수영, “북·중 경제관계와 남북경협의 대북 파급효과 비교분석”, 통일연구원, 제12호 2010, p.112 재인용.

2008	8,005	127,226	-	-	-	270,098
계	3,238,837	2,126,189	3,122,431	1,304,191	496,182	11,671,619

주: 곡물환산치 자료

자료: WFP, *Interfais* 자료, 김영훈,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 『KREI 북한농업동향』 제12권 제2호(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0.7), pp.17~19 재인용.

중국의 대북 무상지원 규모는 양국의 기밀사항이기 때문에 중국의 공식적인 발표 이외에는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중국은 비공식적으로 북한에 대해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⁵¹⁾

1990년대 중반 북·중 정부는 양국 관계악화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양국 관계 복원에 노력하였다. 중국은 1994년부터 대북원조를 재개한 바 있고, 1996년 5월 22일 북한 홍성남 총리의 북경 방문 시 리펑(李鵬) 총리와 대북원조를 포함하는 ‘경제기술합작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은 향후 첫째, 향후 5년간 중국은 북한에 매년 식량 50만 톤, 석유 120만 톤, 역청탄 150만 톤을 제공하고, 둘째, 이 가운데 받은 무상으로 하고 나머지 받은 국제가격의 1/3로 한다. 셋째, 기타 소비재도 80%는 우호가격으로 공급한다는 내용이다.⁵²⁾ 1999년 6월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대규모 외교사절단의 방중 시에 중국은 식량 15만 톤과 무연탄 40만 톤 (총 5,000만 달러 상당)의 무상 원조를 결정했다.⁵³⁾

2000년대에도 양국은 정상 및 고위급 회담을 통해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 약속이 이루어졌다. 2001년 장쩌민 국가 주석이 방북하였을 때 식

51) 앞의 서, p.113.

52) 조명철 외,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p.119.

53) 人民日報, 1999년 6월 5일. 이수, “한중 수교 이후 북·중 관계-중국의 시각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국제정치전공, 석사학위논문, 2008, p.37 재인용.

량 20만 톤과 디젤유 3만 톤을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2002년에는 김일성 주석의 90회 생일을 맞아 북한에 5,000만 위안(약 만 달러)에 상당하는 물자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004년에는 북한의 2차 6자 회담 참석에 대하여 5,000만 달러 상당의 경제지원과 에너지 지원을 약속하였고 남포시 대안친선유리공장 신축비로 2,400만 달러를 무상 지원하였다.⁵⁴⁾

핵문제로 인해 양국 관계가 불편했던 때를 제외하고는 2000년대 중반 이후에도 중국의 대북지원은 약속과 합의가 있었다. 2005년 10월 북한을 방문한 후진타오 주석은 김정일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약 20억 달러의 장기 원조를 표명한 바 있다. 같은 달 방북한 중국 국무원 우이 부총리는 광산개발 제철공업 항구개발 등 대 중공업 분야에서 기존의 북한 중공업 단지와 함경북도 일원에 개발 원조를 해주기로 합의하였다. 2007년 9월에 중국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하여 북한에 5만 톤의 중유를 제공하였다. 2009년 10월 원자바오 총리는 “조·중 우호 60주년”을 맞아 북한을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과 ‘5개년 경제기술협력협정’을 체결하고 20억 달러 상당의 대북 경제원조와 투자에 합의하고 신압록강대교 무상건설, 나진항 부두개발 및 도로건설에 착수하기로 약속하였다.⁵⁵⁾

양국 정상회담 및 고위 인사의 상호 방문 시 중국이 북한에 약속한 지원의 상당 부분은 공식적인 지원에 포함되어 있겠지만 동시에 상당부분은 누락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중국의 대북지원에서는 공식적 지원보다는 비공식적인 지원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북·중관계가 긴밀해지면서 북한은 중국에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고 중국은 북한을 자국의 영향권 아래 두기 위해서 대북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중이다.⁵⁶⁾

54) 최수영, “북·중경제관계와 남북경협의 대북 파급효과 비교분석”, 통일연구원, 제12호 2010, p.114.

55) 앞에 서, p.115.

56) 앞에 서, p.115.

제3장 북·중 경협외 정치외 협외

제1절 중국외 대한 협외

1. 동북아 전략외 필요

1) 중국외 동북아외 대한 인식

1991년 소련외 붕괴되면서 세계질서외 중심은 미국외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미국외 세계외 유일한 초강대국외로 부상하면서 세계 각 지역외도 많은 변화외 일었다. 동북아 지역외도 예외가 아니었다. 동북아지역은 전통적 우방외인 일본외과 한국외이 위치하고 있으며, 떠오른 강대국외인 중국외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계질서외의 재편은 동북아 지역외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신강대국외으로써 중국은 동북아 지역외의 역학 구도를 다음과 같이 인식하고 있었다.⁵⁷⁾ 첫째, 중국은 현재 동북아 지역에서 일초다강(一超多强)외의 다극화 추세외와 세력균형 상태는 중국외의 국가이익외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소련 붕괴외이후 동북아지역에서는 중·미·러·일의 다극체제를 형성해 왔고 동북아 정세는 어느 국가외도 독점할 수 없는 상황외로 전개되고 있다. 중국은 현 상황이 유지한다면 초강대국 성장 이후 중국외이 동북아지역에서의 패권 장악외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둘째, 주변국외과의 선린관계강화로 중국은 자국외의 안보환경이 과거 어떤 시기보다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러시아와

57) 이주형, “중국의 대日 인식과 中日關係”, 『대한정치학회보』 17집 3호 2010년 2월, pp.201-202.

국경문제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경제협력 등을 통한 상호 신뢰회복 노력으로 러시아로부터 직접적인 안보위협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 과거 적대관계에 있었던 인도, 베트남, 한국 등 주변국들과 관계정상화를 이룸으로써 중국은 주변국들로 인한 안보위협이 현저히 완화되었다.

셋째, 중국은 미국이 동북아지역에서 진행하는 연합 군사훈련과 한미일 군사동맹에 있어서 자신에 대해 직접적 혹은 간접적 안보위협을 주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일본 군사력 증강과 안보정책의 독자성 주장에 대해 조심스럽게 관망하고 있다.

넷째, 중국은 남사군도와 조어도의 영유권 분쟁 및 북한의 핵문제 등이 아·태 지역 정세에 불안요인이 되고 있으며, 중국의 국가이익에도 위협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중동에서의 전쟁을 마감하고 아시아로 진출을 선언한 현 시점에서 미국의 군사적 전략 변경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인지하고 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중국은 군사력 강화 및 태평양으로의 진출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평화를 발판으로 하는 지역 내의 평화를 위한 세력 균형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세계적 강대국의 위치를 도모하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는 미국과의 대립보다는 협력속의 견제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유지하면서 미·일 군사협력과 일본의 군사력 강화를 견제하고 있다.

2) 동북아에서 중국의 양자관계의 특징

(1) 중·미관계: 협력과 견제

중국은 중·미관계를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대국관계의 하나이며, 동시에 가장 처리하기 어려운 양자관계의 하나로 보고 있다. 중·미 관계에

있어 양국 협력이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양국 간 상호불신과 경계로 인하여 충돌과 대결을 피할 수 없다. 그 이론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⁵⁸⁾

첫째, 대국 간 불균형 발전이론이다. 세계 대국의 발전을 역사적으로 고찰하면 대국 간에 발전이 시간적으로 불균형을 이룰 때 신흥대국과 기존 대국 사이에 충돌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이런 충돌의 근원은 세계 자원의 유한성과 자원점유의 불균형에 있다. 기존 대국은 더 많은 자원을 점유하고자 한다. 대국의 패권이란 사실상 세계자원을 독점하고 통제하려는 행위이다. 그런데 반해, 신흥대국은 지금까지의 자원분배 구조와 방식을 부인하고 재분배 방식을 요구한다.

둘째, 제국주의 이론이다. 미국은 제국주의 국가이며, 또한 패권 국가이다. 제국주의 본질은 침략과 전쟁이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며, 또한 반패권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이다. 중·미 양국의 대결원인은 국가이익의 모순과 충돌에도 있지만, 그 보다 양국 사회제도의 모순과 충돌에 더 큰 원인이 있다.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상대방을 적수로 만들고 싶어 하지 않지만,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라는 두 가지 제도와 이념이 갖는 부조화로 인해 중·미 대결은 불가피하다.

셋째, 지정학(地政學)적 군사전략이론이다. 어떤 사람들은 미국이 건국 경험을 통해, 국가가 강대해지려면 우선 넓은 판도를 확보하고 다음으로 다른 대국의 굴기를 저지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임을 터득하였다고 말한다. 즉, 상대의 판도를 해체하고 상대가 분열 중에 내부적으로 힘을 소모케 하는 조종방법이다. 유럽의 지정학적 판도를 해결하고 나서 미국은 다음 목표를 굴기하는 중국에 돌리고, 중국을 분열 상태에 빠뜨려 세계대국이 되는 기회를 철저히 박탈하려고 한다.

미국의 지정학적 필요에서 보면, 대만, 남사군도, 서장(西藏; 티베트)을 중국에서 사실상 분리시키는 것이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장기적 패권전략에 부합된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에서 분리된 대만을 통제하게 되며,

58) 손상하 역, 『등소평과 21세기 중국의 전략』, 서울: 유스북, 2005, pp.315-318.

북쪽에서 일본을 견제하고, 남쪽에서 ASEAN을 위협하며, 서쪽에서 중국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미국은 말라카 해협을 전략적 기지를 상실하게 하려 한다. 이렇게 되면 중국은 말라카 해협을 통해 인도양으로 들어가는 전략적 요지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는 것이다. 서장은 중국이 중앙아시아, 중동 및 인도양 지역으로 진출하는 전초기지의 하나이다. 따라서 서장을 분리시켜 중국의 역량이 중동·중앙아시아로 확대되는 것을 저지하는 것이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대중 전략목표이다.

넷째, 문명충돌이론이다. 문명충돌이론은 헌팅턴에게서 유래한다. 헌팅턴은 동방의 한 유교문명 대국과 기독교 대국 간에 필연적으로 충돌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중국과 미국은 각각 서로 다른 문명체제에 속하며, 유교전통을 가진 중국의 굴기(崛起)는 대규모 문명전쟁의 근원이 될 것이고, 머지않은 장래에 유교의 중국과 이슬람의 국가가 연합하여 미국을 핵심으로 한 서방 기독교 문명에 반대하는 전쟁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이론이다.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은 문명충돌 이론을 마치 실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 세계 경제적으로 광범위한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는 미국이라는 존재는 중국 경제발전의 모든 핵심영역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협력의 대상이기에, 어떤 이유에서건 미국과의 관계를 극단적 대결로 악화시킬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미국 역시 세계전략이라는 차원에서 최소한 중국을 적으로 만들지 않는 편이 유리함은 물론이다.

결국 양국 간의 관계는 ‘협력’과 ‘견제’가 사안에 따라 가변적으로 또는 일정 수준에서 배합되어 운용되는 복합적인 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 중국은 강대국의 지위를 굳히기 위해 미국의 독점 영향력을 견제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고, 미국은 역시 유일한 초강대국으로서의 독자적 세계전략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중국의 부상을 견제해야 할 입장에 있다.⁵⁹⁾

59) 김지동, “중국의 패권전략과 한국의 대응 연구”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2) 중·일 관계: 지역주도권 쟁투

중·일 관계는 개괄적으로 정냉경열(政冷經熱)이라고 할 수 있다. 동북아 지역에서 일본은 미·일 동맹체제하에서 안보강화, 자원 및 시장의 안정적 확보, 해상 수송로 보호를 국가이익으로 상정하고 있다.⁶⁰⁾ 일본은 변화하는 동북아 안보환경 속에서 자국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최후의 방패로써 미·일동맹의 전략적 중요성을 평가하고 있다.⁶¹⁾ 안보적 측면에서 미·일 동맹체제 하에서 안전보장을 모색하면서 경제력을 바탕으로 정치·군사 대국의 지위 확보를 도모하고 있다.

일본은 중국의 성장을 동북아 안보에 심각한 위해요소로 지목하면서 지역 강국으로 급부상한 중국과 경쟁이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일본은 미일 동맹체제유지, 방위력 증강 및 군사력 현대화, 자위대의 해외파병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일 관계에는 북핵문제를 비롯하여 대만문제, 역사인식 문제, 미국의 미사일방어(MD) 문제, 조어도 문제 등 다양한 모순에 직면해 있다. 중국은 이런 모순이 언제든지 표출될 것으로 인식하여 일본을 미·일동맹의 종속변수로 취급하고 있다.

중국은 일본이 동북아에서 중국의 호적수가 되지 않기를 원하지 않는다. 과거 일시적으로 일본의 군국주의가 아시아를 지배했던 불행한 역사적 경험은 중국에게 일본에 대한 뿌리 깊은 경계심을 갖도록 하는 원인이 되었다. 중국지도부가 전후 일관되게 국제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반제 및 반자본주의를 제창한 배경도 미국과 일본을 견제하려는 의도였다.⁶²⁾

문, 2010, pp.57-59.

60) 김성철, 『일본 외교와 동북아』, 서울: 한울, 2007, p.67.

61) 진창수, 『일본 정세 전망』, 서울: 세종연구소, 2008, p.17.

62) 김지동, “중국의 패권전략과 한국의 대응 연구”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2010, p.63.

중·일 갈등의 근본적 배경은 양국이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 질서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경쟁은 두 나라의 역사인식문제와 대만문제에서 두드러진다. 중·일 양국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핵심 원인은 중국의 급부상과 일본 국력의 상대적 침체에 따른 역내 역학구도의 변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중국은 30년의 개혁·개방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일본과의 국력차를 크게 줄여 왔다. 반면에 일본은 199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중국과 선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로 하여 일본은 1868년 ‘명치유신(明治維新)’ 이래 처음으로 강대한 중국과 맞서게 되었으며, 중국의 패권에 대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중·일 관계는 과거 중·미 관계의 역동적 변화에 따라 커다란 영향을 받아 왔으며, 탈냉전 이후에도 견제와 경쟁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중·일 안보관계는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개선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데, 그것은 전략적 구도뿐만 아니라 역사인식문제 등에 기인한다.⁶³⁾

(3) 중·러 관계: 전략적 동반자 추진 필요

중·러 양국은 1989년 5월 고르바초프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정상화된 이래 정상간 상호방문이 정례화 되었다. 외교관계도 초기 선린우호관계에서 건설적 동반자관계로, 다시 전략적 동반자관계로까지 발전되어 왔다.

중국의 지도부는 러시아가 중국의 대외 정책 중 아주 중요한 지위를 점하고 있으며, 러시아와의 친선우호 및 상호협력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장기적인 국책으로서 중국의 최대이익에 부합된다고 강조해왔다. 중국의 장쩌민 전 국가주석은 중국과 러시아 관계발전의 네 가지 기초를 언급하였다.

첫째, 중국과 러시아는 서로 인접하고 있는 최대 국가로 상호 신뢰를

63) 이창형 외, 『중국이나 미국이나』,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8, pp. 125-127.

증진시키고 상호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유지하는 것이 쌍방 간의 근본이익에 부합한다.

둘째, 중국과 러시아 양국은 모두 거대한 국내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부단히 경제개혁을 심화시키고 있는바 양국 간의 협력이 상호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셋째, 중국과 러시아 양국은 세계대국이며 UN안전보장 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 함께 세계평화와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세계의 번영과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중국과 러시아, 인민은 전통적으로 우호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서로 좋은 친구, 이웃, 동반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다.⁶⁴⁾

특히 아태 지역에서 중국과 러시아간에는 협력적 요소가 경쟁적 요소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중국은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미·일동맹관계의 강화를 원치 않으며, 아태 지역이 특정 국가나 국가집단에 의해 주도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중·러는 미일 양국의 TMD 구축에도 반대하고 있다. 특히 반MD 관점에서 볼 때, 중·러 협력관계의 진전은 2001년 7월의 ‘중·러 선린 우호협력 조약’체결의 결과로 나타났다. 공동 성명에서 양국은 미국의 패권주의적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의 MD정책에 반대, 미국의 일방적 ABM 조약 파기에 대한 반대, TMD 체제의 대만 내 구축반대 등을 분명히 했고, 유사시 안보위협에 공동 대응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함으로써 군사적 유대를 한층 더 강화하였다.⁶⁵⁾

그러나, 중·러 관계에도 몇 가지의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 먼저, 러시아 사회의 일부 인사들의 심리적 불만의 문제이다. 과거 구소련은 사회주의의 맹주였고, ‘초강대국’을 경험했었다. 구소련이 해체된 이후 과거

64) 정도엽, “동북아 정세변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안보전략 모색” 동국대학교 국제관계학 전공 석사학위논문, 2011년, p.49.

65) 김재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정책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대응전략”, 『국가전략』 2004년 제 10권 1호: 위의 논문 p.51 재인용.

의 지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이에 대해 러시아 사회의 일부 인사들은 심리적 불편함 때문에 중·러 우호관계를 곱지 않은 눈으로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들 인사들은 중·러 우호관계에 불리한 발언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사들은 주류가 아니다. 또한, 중·러 경제무역관계의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다. 이는 중·러 경제발전의 수준이 다르고 양국 간의 차이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다양한 제품을 수출한다. 그러나 러시아는 주로 에너지와 자원 등 자원수출에 의존하고 생산품도 단조롭다. 이러한 한계는 양국 경제무역액과 양국경제규모를 비교할 때 일부 제약을 가하고 있다.⁶⁶⁾

2. 한반도에서 영향력 확보

1)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기조

중국은 한반도를 자국의 국익에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반도가 동북아의 안전을 유지하는 중요한 일환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패권주의를 견제하는 동시에 미국과의 충돌을 완화할 수 있는 완충지대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이나 분쟁이 일어나 중국의 안정과 경제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안정이 깨지는 상황이 되면 중국이 입는 전략적인 손실은 다음과 같다.⁶⁷⁾ 첫째, 중국의 대미전략에서 완충지대로 되는 한반도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중국의 안보에 치명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다줄 것이다. 미국이 한국의 전시작전권을 가지고 군대를 주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에서 무력 분쟁이 일어나면 중국은 ‘중북상호우호조약’

66) 심명성, “중국의 변화가 동북아 세력구도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국제정치학 전공 석사학위논문, 2012, p.63.

67) 하상식, “중국의 대한반도 전략적 이해관계”, 『전략연구』 통권 제51호, 한국전략연구소, 2011.3, pp.110~111.

제2조⁶⁸⁾에 따라 군사적으로 개입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중국에게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미국의 영향 하에 한국이 통일된 상황에서 중국은 미군과 직접 대치하게 되면 미국과의 완충지대로 작용을 상실한 것뿐만 아니라 동북지역에 군대를 많이 주둔시켜야 함으로 동북지역의 경제발전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둘째, 한반도에서 군사 분쟁이 일어나면 중국의 경제 발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현재 미국, 일본, 한국은 중국의 최대 교역파트너 1-3위를 차지하는 국가이다. 따라서 한반도에서의 분쟁은 중국이 북한 편에 군사개입을 한다면 이 3국과 모두 정상적인 경제교류를 못할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3국과의 정상적인 경제교류를 못함을 의미한다. 이것은 중국의 ‘초현실주의적’, ‘증상주의적’ 외교 목표에 반하고 중국 부상의 중단을 의미한다.

셋째, 분쟁으로 인하여 경제가 어려워지면 중국의 사회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중국은 1970년대 후반 이후의 지속적이고 높은 경제성장률은 지도층들로 하여금 경제성장이 대부분의 사회 및 정치병폐에 만병통치약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⁶⁹⁾. 따라서 경제성장에 문제가 생기면 연쇄적으로 민주화 요구 및 소수민족 독립 문제등과 같은 문제가 조성시킬 수 있다.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안정은 중국에게 사활의 이해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

68) “조약 체결 쌍방은 조약 체결 쌍방 중 어느 일방에 대한 어떠한 국가로부터의 침략이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조치를 공동으로 취할 의무를 지닌다. 계약 일방이 어떠한 한 개의 국가 또는 몇 개의 국가의 연합으로부터 무력 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계약 쌍방은 모든 힘을 다하여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지원을 제공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북한이나 중국 일방이 전쟁을 할 경우 다른 일방은 자동적으로 전쟁에 개입, 함께 전쟁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또, 이 조약은 어떠한 일방이 마음대로 종료할 수 없고, 쌍방의 어떠한 일방이 이 조약을 종료하려면 조약 종료일 6개월 전에 알려야 한다. 의견이 없으면 조약은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지금까지 1981년, 2001년 두 번 자동적으로 연장되었고 다음 연장 시기는 2021년이다. 百度百科: 中華人民共和國和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友好互助條約
<http://baike.baidu.com/view/642796.htm>(검색: 2012.7.26)

69) 민신 페이(지음), 황성돈(옮김), 『불확실한 중국의 미래』, 경기도 고양시: 책미래 2011, p.242.

중국은 이런 인식의 바탕으로 우선 한반도의 통일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남북당사자 간의 평화적인 대화와 협상에 의한 자주적인 통일을 지지한다. 현재의 상황으로 본다면 한반도는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의 가능성이 높는데 중국은 북한체제의 붕괴과정에서 현재의 탈북자⁷⁰⁾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수많은 북한 주민이 중국 동북3성 지역으로 유입해 혼란을 가져올 것을 걱정하고 있다.

많은 탈북자가 중국에 유입하게 되면 중국 동북지역의 불안을 조장할 수 있으며, 북·중 정부 차원에서의 미묘한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 문제의 차원에서 외교적인 난제를 일으켜 중국의 입장을 곤란하게 할 수 있으며⁷¹⁾ 국가이미지를 훼손하게 될 것이다.⁷²⁾

다음으로 남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최대한 균형을 유지하는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 즉, 중국은 정치·군사적으로는 북한과, 경제적으로는 남한과 협력을 강화하는 균형을 추진하여 자국의 역할과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북한 핵문제에 있어서도 근본적으로 반대하지만 북한 정권 붕괴를 우려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남한과는 한중수교를 통한 정치관계 정상화, 경제교류의 증대를 꾀하는 한편, 북한과의 관계는 불변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⁷³⁾

70) 탈북자에 대한 중국 정부의 시각은 식량난으로 북한에서 대규모 탈북이 이루어지던 1990년 중반부터 지금까지 시종일관 ‘불법 월경자’로 규정하고 있다.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 2012年2月22日外交部發言人洪磊舉行例行記者會
http://www.fmprc.gov.cn/mfa_chn/wjdt_611265/fyrbt_611275/t907569.shtml
(검색: 2013.1.3)

71) 網易: 潛伏在中國數十萬北朝鮮難民與政府的兩難處境
<http://news.163.com/05/0628/20/1NC3FQJN00011247.html>
(검색: 2012.8.19)

72) 현인택, “새로운 한중협력 시대를 위하여: 외교·안보적 측면”, 『국제관계연구』 제10권 2호,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06, p. 121.

73) 쩡위엔, “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입장변화 분석”, 경북대학교 정치학과 국제정치전공 석사학위논문, 2012, p.32.

2)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확대

중국은 한반도에서 영향력 확대를 강구하고 있다. 소련의 붕괴 이후 중국은 한중수교 및 러시아의 대북 영향력 감소로 북한에 대한 절대적 우위를 보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은 남한과의 정치·경제적인 면에서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우위를 점하고 미국의 동북아 영향력을 견제하고 있다. 동시에 중국은 한반도에서 영향력의 확대를 통해 동북아 역내에서 먼저 ‘책임이 있는 대국’의 국가 이미지와 역할을 만들고 국제적 지위 증대라는 자국의 전략목표를 달성하려고 한다.⁷⁴⁾

중국의 부상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선진국들은 중국에 대한 견제에 돌입하였다. ‘G2시대’의 도래라는 용어처럼,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 사이에 상호견제와 갈등이 드러내고 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은 중국의 발전에 필수적이지만 중국은 미국시장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이 국제체계에서 ‘책임 있는 당사국’이 되기를 바라며 국내에 정치 개방하기를 희망한다. 따라서 중국의 부상은 미국정책 입안자들의 눈엔 ‘중국 위협’으로 비춰졌고, 중국의 부상이 평화적이든지 아니든지 미국에게 위협으로 간주되었다.⁷⁵⁾

미국은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서 강력한 동맹정책으로써 한국, 일본, 호주 등 전통적 우방과 동맹을 강화할 것이다. 그러나 이 세 국가가 중국의 강대한 힘을 무시하고 미국에게 일방적인 지지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호주는 동남아 국가에게 쉽게 차단될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호주를 중국을 견제하는 국가로 삼기에는 지정학적 요소가 약하다. 가장 바람직한 동맹은 한국과 일본이다. 그러나 일본도 기회만 있으면 미국으로부터 탈피하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에게 가장 중요한 전략 국가가 될 것이다.⁷⁶⁾

74) 앞의 논문, p.33.

75) Yue Jianyong, “Peaceful Rise of China: Myth or Reality?”, pp. 440-441. 이상숙, “중국의 대외전략 변화와 한반도 정책”, 2011년도 한국국제정치학회 안보국방학술회의, p.26 재인용.

중국은 한국과의 경제적 유대와 의존성 강화가 자국이 한국에서 확보하고자 하는 전략적 이익과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본다. 중국은 한국에게 교역을 통해 이미 상당한 영향력을 확보한 상태다. 중국은 한국에게 가장 큰 교역 국가이며, 만약 중국이 한국에게 무역보복을 하게 되면 교역에 직격탄을 맞게 된다.⁷⁶⁾

중국 입장에서 보면, 한중관계는 경제의 상호보완성은 물론이고 중미관계 및 중일관계의 강화로 대체할 수 없는 전략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한 한국은 미국과 일본이 대중국 견제전략을 구사하는 상황에서 그 강도를 완화 또는 해결해주는 완충지대이자 균형자이다. 나아가 북한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거나 대응해줄 수 있는 협력자이며, 당면한 북핵 위기를 포함한 북한문제의 해결과정에서 중국의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당사자이기도 하다. 향후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지면 한국이 통일한국을 주도해 나가는 주체가 되리라는 점에서도 한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⁷⁸⁾ 특히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는 한국은 중국이 동북아에서 미국의 견제에 대응하면서,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역내 영향력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전략 대상이다.⁷⁹⁾ 따라서 2008년 한중관계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의 외교관계 격상은 한국에 대한 전략적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한중관계는 경제, 무역협력과 인적교류, 사회문화적인 교류의 증대와 같은 비정치적인 부분에 치우쳐 있고 정치, 안보적인 면에서의 협력은 아직 미진하고 제도화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 원인은 우선, 한미동맹이다. 현 단계 한반도는 여전히 정전체제가 계속

76) 정영철, “21세기 중국의 동아시아 패권전략과 한반도적 함의”, 한남대학교 정치 및 지역개발학과 박사학위논문, 2011, p.207.

77) 문대근, 『한반도 통일과 중국: 과거·현재·미래의 한중관계』, 서울: 늘품플러스, 2009, p.530.

78) 김진홍, “대만 신정권의 대중국 관계개선 정책과 향후 전망”, 『해외경제정보』 43호, 서울: 한국은행, 2008.8.19, pp. 6-7.

79) 전성홍·이종화, 『중국의 부상, 동아시아 및 한중관계에의 함의』, 서울: 오름, 2008, p.20.

되고 평화체제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냉전적 구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 경계를 하고 있다.⁸⁰⁾

한편,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절대적 영향력의 행사하는 것은 한반도 및 동북아에 있어서 피동적 자세로 전략하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지역에서 자국의 활동공간을 확보해 가는데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갈등이 심화된 것도 불구하고 북한을 자국의 영향력 하에 두어 북한이 중국에 대해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의존하게 만들기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노력은 최고지도부 교류를 통한 인적유대 강화와 신뢰 회복 및 경제교류협력을 통한 상호연계의 강화 등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2009년 10월 원자바오 총리 방북을 들 수 있다. 중국은 원자바오 방북을 통해 김정일 위원장으로부터 ‘6자회담 재개’에 대한 약속을 받아냄으로써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중국의 역할과 지위를 공고히 하였다. 그동안 6자회담은 영원히 끝났다고 소리치던 김정일 위원장이 원자바오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며 조건부로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있다고 언급한 점은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의 과시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⁸¹⁾

제2절 북한에 대한 합의

1. 국제사회의 대북제재현황

1)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2006년에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고 유엔 안보리가 동년 10월4일 안

80) 이남주, “한중 전략적 동반자관계 1년의 평가와 전망”, 『세계전략연구』 제6권 제2호, 2009, pp.55-56.

81) 박병광, “원자바오 총리 방북과 북·중관계”, 『국제문제』 11월호, 2010, pp.17-25.

보리결의 제1718호를 발포하여 북한을 제재하였다. 결의안에 따라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에 대해 군용장비나 제품 및 기술지원, 핵무기 프로그램,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및 생화학무기 프로그램 리스트에 등재된 관련 물자, 장비, 제품, 기술 및 기술지원이나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였고 북한에 대한 사치품 수출 금지, 북한 인력의 출입국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⁸²⁾

2009년 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강행 후 유엔 안보리는 동년 6월 12일, 대북제재 결의 제1874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34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1718호 결의안보다 제재 범위와 수준이 훨씬 강력하다. 결의안은 북한 화물 검색과 무기금수 및 금융제재에 대해 강력한 입장을 취했다. 먼저, 화물검색과 관련하여 북한을 오가는 선박이 금수대상 무기를 싣고 있다고 의심되면 공해상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선박이 반발할 경우 인근 항구로 유도해 검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다음, 무기금수와 관련하여 결의안은 북한의 주 외화수입원인 무기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소형무기가 하나라도 북한 땅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금융제재와 관련하여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 미사일 프로그램에 기여 할 수 있는 모든 금융거래를 금지시켰다.⁸³⁾

유엔 안보리는 제1874호 대북제재 결의한 후에 동년 7월 16일 이례적으로 북한 핵실험 및 대규모살상성무기(WMD) 확산에 관여한 개인 5명과 5개 기업·기관<표13 참조>, 그리고 미사일 제조 등에 사용되는 첨단 소재 2개 물자를 대북 제재대상으로 지정하여 유엔 회원국에 공식 통보하였다. 유엔안보리가 북핵과 관련하여 북한 정부요원을 거명하며 제재대상에 올린 것은 드문 일로서 제재의 실효성 여부를 떠나 북한의

82) "Security Council Condemns Nuclear Test by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esolution 1718(2006)", Security Council SC/8853, 14 October 2006. 이평규, 2011, "대북제재의 전개과정과 효과성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 p.68 재인용.

83) 유석렬, "국제사회의 반응과 대응책" 『북한』 5월호, 2010, pp.48-49.

비핵화를 위한 유엔안보리 결의의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표 13> 유엔 안보리 결의 제1874호 대북 제재대상자 및 제재사유

제재 대상자		제재 사유
개인	리제선(원자력 총국장)	북한 핵프로그램 최고책임자, 영변원자력연구소 및 남촌강무역회사를 관리
	리홍섭(前 영변 핵연구소 소장)	무기급 플루토늄 생산지원 3개 핵심 시설 관장
	윤호진(남촌강무역회사 사장)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위한 물자수입책임자
	한유로(조선용약산총무역회사 간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기업·기관	황석화(조선 원자력총국 핵프로그램 책임국장)	원자력총국의 과학지도부 책임자로 핵연구기관 연합체의 과학위원회를 주도
	조선 원자력 총국	북한 핵프로그램 개발의 컨트롤 타워로서 연료구조물과 재처리 시설뿐만 아니라 영변 핵연구소와 플루토늄 원자로 등을 관리
	홍콩 일렉트로닉스	이란소재 북한기업으로 조선광업무역회사 및 단천상업은행을 대리하여 WMD관련 자금운용담당
	조선 단군무역회사	북한 제2과학원 산하기관으로 핵미사일 연구와 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키 위한 상품과 기술 획득 책임을 맡음
	조선 혁신무역회사	조선 련봉총회사에 소속하고 있으며 대량 살상무기개발에 연루되어 있음
남촌강 무역회사	원자력 총국 산하의 무역회사로 우라늄 농축용 알루미늄 튜브와 장비 등 구입관여	

출처: 이평규, “대북제재의 전개과정과 효과성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 2011, p.71; 유석렬, “강력한 대북 국제 제재와 북한의 곤경”, 『북한』 5월호, 2010, pp.50; 참조 정리.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미국은 외교적 영향력을

이용하여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에 각국이 협력하도록 적극 나서고 있다. 미국은 말레이시아에 마카오의 방코델타 아시아사태 이후 북한이 무역 거점을 옮긴 사실을 알리고 경고의 뜻이 담긴 협조를 요청하였다. 또한 국제금융 채널을 통해 북한의 핵과 무기 수출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 17개 북한은행과 기업들에게 제재를 가하였다. 이로 인해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인 무기판매 수익이 유엔제재로 1년만에 80%가량 감소하였다.⁸⁴⁾ 뿐만 아니라 미국은 해외주재 공관을 통해 각국이 유엔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EU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관련, 북한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를 대상으로 고강도 제재 조치를 단행하였다. EU는 2009년 12월 22일 브뤼셀에서 열린 환경 이사회 회의에서 입국금지 대상자, 대북 금수(禁輸)대상 물품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 대북한 제재‘규정(Regulation)’ 개정안은 승인하였다.⁸⁵⁾

2) 한·미·일 3국의 대북 제재실태

(1) 한국의 대북제재

한국의 역대 정부는 북한에 대해 다양한 정책을 전개하였다. 1972년 남북대화가 시작되었고 각 정권은 모두 북한과의 대화를 추구하였다. 과거 김대중·노무현정부는 일관되게 대북포용정책을 채택하였다. 대북포용정책의 목표는 북한을 서서히 변화시킨다는 것이며, 북한의 변화를 강제하기 보다는 설득한다는 정책이었다. 그러나 국민들의 비판과 불만이 많이 제기되어 왔다.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 10년 동안 북한에 대한 지원은 확대되었으나 남북대화의 주도권을 가지지 못했으며, 북

84) 『서울신문』, 2010년 3월11일. 유석렬, “강력한 대북 국제 제재와 북한의 곤경”, 『북한』 5월호 2010, p.49 재인용.

85) EU의 ‘규정’은 유엔안보리 결의 1874호와와는 별개로 27개 회원국이 무조건 지켜야 하는 가장 강력한 규범으로 각 회원국 실정법에 우선한다.

한이 핵실험까지 한 것에 대해 한국국민들은 불만을 표출하였다.⁸⁶⁾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취임사를 통해 북한의 핵 포기, 생산적인 남북 관계, 상호 존중, 대화의 문호 개방 입장 등을 천명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상생·공영’을 대북정책 방향으로 정립하고,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하였다. 남북 간의 상생·공영은 북한 핵문제 해결이 기본이다. 그 이유는 북한 핵문제가 남북관계 발전과 남북경협에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상품이 미국 및 자본주의 시장에 수출되지 못하는 것도 북핵문제로 인한 것이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정상적 일원으로 참여하는데도 장애가 된다. 비핵화가 이처럼 남북관계 발전, 북한의 경제회생에 구조적 조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는 비핵화를 최우선 순위로 추진하고 있다. 비핵화를 위한 ‘비핵·개방·3000’구상 전략은 북한을 국제사회에 정상적 일원으로 편입시켜서 안보문제와 경제난을 해결하는 길을 마련해줌으로써 핵개발의 근본적 원인을 해소시켜 주려는 것이다.⁸⁷⁾

‘비핵·개방·3000’의 내용은 남북경협의 지속을 통하여 남북관계의 안정 기조를 유지하고, 나아가서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상응하여 대북 경제 협력과 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이 비핵화, 개방화를 통하여 경제발전의 국내외적 조건을 개선할 경우, 10년 내에 국민소득 3,000달러 달성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의 일방적 지원으로 북한의 경제를 그 수준으로 올려놓겠다는 것이 아니다. 한국이 북한의 비핵화, 개방화를 유도하면서 북한에 대한 국제자본 유입을 촉진하고 국제기업 투자를 유치하고 한국의 기업도 활발히 북한에 투자하여 북한경제를 세계경제에 편입시키는 것이 주요 방법이다.⁸⁸⁾

86) 전형준, “북핵 문제의 실체와 한·미의 대응 전략”, 대진대학교 북한학과 석사학위논문, 2011, p. 90.

87) 조준성, “韓國의 對北政策變動要因에 관한 研究: 北核問題를 중심으로”, 경원대학교 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2011, pp.71-72.

88) 조준성, “韓國의 對北政策變動要因에 관한 研究: 北核問題를 중심으로”, 경원대학교 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2011, p.72.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의 대북정책이 갖는 특징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상호주의가 결여된 포용정책도 아니고 강경일변도의 대북정책이 아닌 '상호적 포용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비핵·개방·3000구상에 따라 북한 핵포기와 개방을 설득, 유도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북지원과 협력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 기조가 근거에 깔려있다. 대북지원과 경험 등을 통해 북한의 변화가 초래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보다는 북한의 변화에 따라 지원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포용정책과 차별성을 갖는다. 결국 북한에게 이끌려 다니면서까지 '퍼주기식'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⁸⁹⁾

북한은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부터 일방적으로 남북대화를 중단하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대북 적대정책이라고 비난하면서 위협하는 등 대남 강경 정책을 지속했다. 2008년 3월에는 당국 간 대화가 중단되었고 4월부터는 대통령 비방, 7월에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이 일어났다. 11월에는 관문점 직통전화도 단절되었고 12월에는 육로통행을 제한하였다. 2009년 1월에 들어서는 전면대결 태세에 진입하였고, 3월에는 군통신선과 육로통행을 차단하였으며, 4월에는 장거리 로켓 발사, 5월에는 2차 핵실험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대화 중단, 비방 중상과 강경조치에 흔들리지 않고 원칙을 지키며 의연하게 대처하였다. 그러면서도 남북 간 인적·물적 교류, 개성공단 등 기존의 경험사업을 유지·발전시키면서 지원을 유지하였다.⁹⁰⁾

2010년에 천안함 폭침 사건이 발발하자 북한의 결백 주장에도 불구하고 동년 5월 20일에 이명박정부는 천안함 폭침사건의 원인을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것이라고 발표하였다.⁹¹⁾ 이에 이명박 대통령은 동년 5월

89) 전형준, "북핵 문제의 실체와 한·미의 대응 전략", 대전대학교 북한학과 석사학위논문, 2011, pp. 93-94.

90) 조준성, "韓國의 對北政策變動要因에 관한 研究: 北核問題를 중심으로", 경원대학교 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2011, p.74.

91) 網易: 韓國公布天安艦遭朝鮮魚雷擊沉證據
<http://news.163.com/10/0520/09/6748VQ3E000146BC.html>

24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북한의 행동을 강력히 규탄하고, 통일·외교통상·국방 3부 장관은 합동기자회견을 통해 5.24조치를 발표했다. 5.24 조치로 현재 남북 간 일반교역은 물론 위탁가공 교역을 위한 모든 물품의 반출과 반입이 금지되고 있으며(개성공단 제외), 대북 신규 투자 및 진출을 불허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실시하고 있다.⁹²⁾

(2) 미국의 대북제재⁹³⁾

미국의 대북제재 기원은 이미 60년전 시작되었다. 미국은 한국전쟁이 일어난 직후인 1950년 6월 28일 수출관리법을 통해 북한에 대한 수출을 금지시켰다. 수출관리법에 따르면, 북한에 대한 식량 및 기초생활품 등 인도적 차원의 상품수출만 허용하고 이외 모든 품목에 대한 수출은 불허한다. 그해 미국은 12월 적성교역법에 의거 해외자산통제규정을 제정하여 미국 내 북한자산을 동결하고 북한과의 무역과 금융거래를 금지시켰다.

이후 미국은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이고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다양한 법적 근거를 통해 경제제재를 강화하여 왔다.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라는 근거로 미국이 적용한 대표적인 대북 경제제재에는 브레튼우즈협정법, 수출입은행법, 무역협정연장법, 대외지원법 등이 포함된다. 브레튼우즈협정법은 공산국가인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원조를 받는 것을 금지시키고, 수출입은행은 미국 수출입은행의 대출·보증 등 여신제공을 금지시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무역협정연장법은 대통령령 및 한국과 관련한 무역협정 통지서에 의거 북한을 공산국가로 지정하고 최혜국대우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

(검색: 2012.12.19)

92) 이평규, “대북제재의 전개과정과 효과성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1, p.79.

93) 장단, “북한무역의 대중 의존성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무역학과 석사학위 논문, 2012, p.47.

라 북한은 북미무역에서 특혜관세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대미무역에서 무역규모 축소를 가져오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외지원법이란 인권침해국가, 공산국가, 테러지원국 등에 대한 지원 및 원조를 금지하는 법으로, 이는 미국의 원조뿐만 아니라 국제금융기구들이 미국 출연자금을 대북지원에 사용하는 것까지 금지시키고 있다.

현재 미국의 대북제재 근거는 북한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고, 공산주의 국가이며, 테러국을 지원하고 있고, 대량살상무기를 수출하고 확산하는 국가라는 데 두고 있다. 이러한 네 가지 제재 근거 중 1990년대 이전에는 한국전쟁에 따른 미국의 국가안보 위협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라는 것이 중심이 된 반면에, 1990년대 이후에는 테러 및 무기 확산과 관련된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3) 일본의 대북제재

일본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지 않으며, 북한의 반복되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일본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명백한 위협으로서,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일본의 대 북한 제재는 2003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실험 감행 및 일본인 납치문제와 연동하여 추진되었다. 특히 일본의 제재 움직임은 2002년 9월 북·일 정상 회담을 통해 북한이 일본인 납치사건을 시인한 이후 급속도로 진행되어졌다. 동년 10월 북한이 핵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지자, 대북제재를 강화하기 시작하였다.⁹⁴⁾

북한에 대한 일본의 제재는 크게 인도지원에 대한 동결·연기, 송금보고의 의무화, 특정품목의 무역정지, 특정선박의 입항금지 및 무역 전면정지, 선박의 전면 입항금지 등 5가지로 구분된다.<표14 참조>

94) 장단, “북한무역의 대중 의존성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무역학과 석사학위논문, 2012, p.48.

<표 14> 일본의 대북제재종류와 내용

구분	내용
인도지원 동결, 연기	북한에 대한 지원 원조 중단
송금 보고 의무화	3,000만 엔 이상을 북한에 송금하는 개인, 단체당국에 보고 의무화
특정품목 무역정지	특정품목에 대한 양국 간 무역제한, 역무거래, 대외직접투자 모두 규제
특정선박 입항금지, 무역 전면 정지	특정선박의 입항 금지, 북한과 무역 전면 금지, 선박유탁손해배상법 개정, 시행
선박 전면 입항금지, 전세기 취항금지	북한 선박의 일체 입항 금지 북·일간 전세기 취항 전면금지

출처: 조명철 외, 『북한의 대외경제 제약요인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p.92.

일본은 북한 국적 선박의 입항 전면 금지와 북한으로부터 수출입 전면 금지라는 독자적 강경조치를 강행하고 있으며, 지난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추가제재에 나서고 있다.⁹⁵⁾

2. 북한의 국제적 고립의 탈출과 체제안전 도모

북한은 자급자족경제를 기반으로 한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국가 가운데 하나이다. 더욱이 2000년대 이후 계속된 핵실험과 로켓 발사 등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이미 오래 전부터 시작되었고 50여 년 전부터 핵무기 개발계획을 세우고 하나씩 실천해 왔다. 북한은 1970년대 이전에는 전후의 경제회복과 산업화에 따른 에너지 전력 확보에 중점을 두었지만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도 계속해서 추진하였다. 그 원인은 북한은 6.25전쟁 기간 중 맥아더 장군과 트루먼, 아이젠하워 미 대통령의 핵 공격 위협에 시달렸기 때문이다. 그래

95) 전우형, “일본의 대북교역 차단, 실질적인 효과는”, 북한경제정보, 2010, p.1.

서 50년대 중반부터 북한 지도부는 미국의 핵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핵무기개발 프로그램을 시작하도록 지시하였다.⁹⁶⁾ 그 후에 1990년대 초 1차 핵위기를 시작으로 2000년대 이후 두 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하였다.

북한은 남북간의 협의, 국제사회의 요구를 무시하고 우방인 중국의 설득과 만류에도 불구하고 핵무기개발을 계속 강행하였다. 북한이 핵무기개발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⁹⁷⁾

첫째, 북한은 주권보호 및 정권안보 유지 차원에서 핵무기가 필요하다. 북한이 핵 개발을 착수하게 된 동기는 국가안보 또는 정권안보 유지를 위한 정치적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정권의 목표는 북한체제의 유지이다. 비록 북한이 겉으로 드러난 군사력에서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할지라도 남북 간의 경제 격차에 의한 군사비 지출의 상대적인 열세는 북한으로 하여금 심리적인 불안을 느끼게 한다.

더욱이 북한은 전반적인 경제사정이 악화됨으로써 군사비 지출이 무척 어려운 상황일 뿐만 아니라 러시아나 중국으로부터 군사적 지원을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자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느끼게 되었다. 따라서 북한 지도부는 이러한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핵무기 개발을 선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외교적 수단으로의 활용을 위해 핵 개발이 필요하다. 북한의 핵개발목적은 남북관계와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개선에 있어서 북한의 의지를 보다 강하게 주장하기 위한 방안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즉 북한은 핵 개발을 통해 남북관계와 대외관계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핵 개발 의도가 한국에 대한 강압의 수단으로서 추진하고 있다는 분석은 북한이 취하고 있는 협상태도에서 엿볼 수 있다. 북한은 이미

96) 월터 클레멘스(Walter C. Clemens), 『북한을 합의에 이르게 하는 전략』, 서울: 한울아카데미, 2010. p.117.

97) 정귀화,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과 북핵문제”, 『지역발전연구』, 제11권 제1호, 2011.8.31, pp.109-110.

오래 전부터 한반도에서의 군사문제는 북-미 양국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셋째, 국제적 지위와 위신의 제고이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통해 사회주의 강국정책을 추구함으로써 대외적으로는 실질적인 정치적 위신과 협상지위를 높이고, 국내적으로는 국내정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넷째, 경제적 파급효과의 제고이다. 북한경제는 1990년대에 들어와 4년 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북한정부는 재래전력 증강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하여 대남 군사우위를 유지하면서 그로부터 절감된 군사비를 민간경제 부분으로 전환하고자 했다.

이러한 원인으로 북한은 핵실험을 계속하였고, 국제사회의 제재에 직면하였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북한의 고립을 심화시켜, 북한의 대외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차단시켰다. 이런 외부적 환경은 북한 내부의 불안정과 경제적 곤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의 전략적인 선택은 중국과의 경협강화일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수령 통치체제이다. 통치자의 절대권위가 앞선 통치자의 직위를 승계함으로써 정당화되고 통치권자가 국가의 모든 권위를 초월하는 절대 권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절대군주시대의 통치체제와 근본적으로 유사한 측면이 강하다.

다만, 형식적으로나마 주권자인 인민의 간접적 위임절차를 통과함으로써 인민민주주의의 모양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절대군주제와 외형을 달리할 뿐이다. 따라서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수령의 건강이 악화되거나 실각하게 되면 정권 및 체제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김정일은 2010년 9월28일 제 3차 당대표자회를 통해 후계자로 김정은을 공식화하였다. 김정일 유고에 의한 급변사태는 김정일이 사망하여 북한 내부에

서 권력투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정권과 체제, 국가 존립에 심각한 상황이 초래되는 경우이다.⁹⁸⁾ 김정은 후계체제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구축하느냐에 따라 북한 정권 및 체제의 존망이 걸려있다.

김정일이 자신의 아들 김정은으로의 후계구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주목한 것은 중국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점이었다. 북한과 중국은 혈맹관계를 강조해왔지만 2006년 10월 북한의 핵 실험 강행에 불쾌한 감정을 드러낸 중국 지도부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참여함으로써 양국 간에는 냉랭한 기운이 감돌았다.

김정일이 김정은을 후계자로 전면에 내세우기 한 달 전 2010년 8월 26일부터 30일까지 중국을 방문한 것은 김정은 후계 내정을 중국 측에 알리려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었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 회담과 공장·농업시설 견학 등의 일정을 통해 후계자 김정은에 대해 중국 지도부의 인정을 받겠다는 의도였다. 이와 함께 김일성의 중국 내 주요 항일혁명유적지를 돌아보는 일정을 잡음으로써 김일성과 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혈통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려 했다. 이는 김정일이 이례적으로 지린시(吉林市)에서 중국 방문 일정을 시작하면서 김일성이 1920년대 다녔던 위원중학교와 학생운동 비밀회합을 연 장소라는 베이산공원을 잇따라 방문한 데서도 잘 알 수 있다. 또 방중 이틀째에는 북한이 주체사상의 진원지라고 선전하는 카룬마을이 인접한 창춘에서 후진타오 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뒤 8월 29일에는 하얼빈(哈爾濱)으로 이동해 타이양다오(太陽島)의 동북항일연군 기념관을 찾았다. 동북항일연군은 1930년대 김일성이 중국 공산당과 함께 항일투쟁을 벌인 무장조직으로 알려져 있으며 김정은은 8월 30일 귀국길에도 무단장(牡丹江)을 찾아 동북항일연군 기념탑을 찾았다. 무단장은 김일성이 동북항일연군을 이끌고 일본군의 박격포를 빼앗아 대승을 거뒀다고 하는 곳이다.⁹⁹⁾

98) Paul B. Stares and Joel S. Wit. "Preparing for Sudden Change in North-Korea," *Council Special Report*, No. 42.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Jan, 2009. p.4.

2000년 이래 여섯 번 이뤄진 김정일의 방중에서 이 같은 행보는 없었으며 대부분이 산업시찰로 꾸러졌다는 점에서 김정은으로의 후계문제와의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다.¹⁰⁰⁾ 한국의 국가정보원도 김정일의 중국방문과 관련해 후계문제와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은 9월 13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김정일 방중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문에 “후계자 인정과 관련해 상당한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또 김정일의 일정에 김정은이 동행했는지 여부에 대해 “(중국방문)행선지와 후계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 점,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일 위원장간 언급한 내용을 감안하면 동행했을 것이라고 짐작한다”고 말했다.¹⁰¹⁾

김정일이 1980년 10월 6차 당 대회에서 후계자로 공식 선출된 후 당 중앙위 비서 자격으로 1983년 6월 베이징을 방문해 덩샤오핑을 만났을 때도 중국 최고지도부로부터 후계지위를 공식인정 받은 것이란 해석이 나온 것과 같은 맥락이었다.¹⁰²⁾

김정일은 김정은을 후계자로 사실상 등장 시킨 이후 중국 측 고위인사의 평양 방문 시 접견자리에 김정은을 배석함으로써 후계자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과시하고 북·중 우호관계를 후대에도 계승해야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김정일은 노동당 대표자회 직후인 2010년 10월 평양을 방문한 저우용강(周永康) 정치국 상무위원을 김정은과 함께 만난 것을 시작으로 귀보슝(郭伯雄) 당 중앙군사위 부주석(2010년 10월), 멩젠주(孟建柱) 국무위원 겸公安부장(2011년 2월), 리원조(李源潮) 당 조직부장(2011년 6월), 장더장(張德江) 부총리(2011년 7월) 등 중국의 주요인사 방북시 김정은을 대동했다. 이 가운데 멩젠주公安부장의 방북은 중

99) 이영중, “북한 후계체제와 권력승계에 관한 연구: 김정은 후계권력 구축과 안정성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행정연론대학원 외교안보학과 석사학위논문, 2012, pp.78~80.

100) 중앙일보, 2010년 10월 4일.

101) 중앙일보, 2010년 9월 14일.

102) 중앙일보, 2010년 8월 28일.

국 지도부가 김정은 후계문제를 가장 분명한 표현으로 인정한 자리로 기록된다. 명젠주는 2011년 2월 14일 평양에서 김정일을 만난 자리에서 “조선노동당 대표자회에서 김정일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되고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대돼 조선혁명의 계승 문제가 빛나게 해결된 데 대해 열렬히 축하한다”고 말했다.¹⁰³⁾



103) 조선중앙통신, 2011년 2월 15일.

제4장 북·중 경협의 경제적 함의

제1절 중국에 대한 함의

1. 중국의 동북3성 진흥의 필요

1) 중국의 지역균형발전전략

1978년 중국은 중국 공산당 제11기 3중전회를 통해 개혁개방을 실시하였다. 개혁개방의 실시는 지역발전의 측면에서 보면 이전 계획경제하의 균형발전전략에 입각한 내륙지역개발 중시에서 벗어나 동부 연해지역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 불균형발전전략으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이 전략의 핵심은 비교우위의 충분한 이용과 성장극의 육성이었다. 중국은 제6차 5개년 계획시기(1981년-1985년)에는 중국을 연해지구(沿海地區), 내륙지구(內陸地區) 및 변경소수 민족 지구(邊境少數民族地區)로 구분하여 지역별 발전전략을 추진하였다. 제7차 5개년 계획시기(1986년-1990년)에서는 동부, 중부, 서부로 지역을 구분하여 단계발전전략을 추진하였다. 1990년에 들어 지역격차가 심화되자 중국정부는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정책을 도입하여 전방위적인 발전전략(全方位發展戰略)으로 전환하였다.¹⁰⁴⁾

동부 연해지역의 경제특구로 시작한 개혁개방은 30여 년 동안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경제성장을 가져옴으로써 지금까지는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불균형 발전전략은 기본적으로 ‘먼저 부자가 된 지역이

104) Du xian, “동북개발전략을 통한 중국의 신 비즈니스 거점화전략에 대한 연구-‘五點一線연해경제벨트’ 구축전략과 長吉圖지역발전전략을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국제경영학과 석사학위 논문, 2011. p.20.

나중에 미발달지역의 경제성장을 이끈다’는 등샤오핑(鄧小平)의 ‘선부론(先富論)’과 ‘두개의 큰 국면(兩個大局)’에서 그 이론 기초를 찾을 수 있다. 등샤오핑은 ‘조건을 갖춘 지구는 먼저 발전할 수 있으며, 일부 지구는 발전이 다소 늦을 수 있다’고 말하여 조건이 갖추어진 동부 연해지역을 우선 개발할 수 있는 이론적 기초를 마련해 주었다. 또한 동부 연해지역은 대외개방을 가속화하여 빠른 시일 안에 우선적으로 발전한다는 것이 ‘하나의 국면’인데 내륙지역은 이러한 국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의 국면’은 연해지역이 발전한 후 이를 테면 20세기말까지 중국의 생활수준이 ‘샤오캉(小康)’수준에 이르면 더욱 많은 역량을 동원하여 중서부내륙지역 발전을 도와야 한다는 것으로, 이때에는 연해지역 또한 이러한 국면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두 개의 큰 국면론(兩個大局論)이 ‘제도이론’과 동부지역이 먼저 발전하고 서부지역이 후에 발전한다는 ‘선동후서(先東後西)’의 발전전략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동·서 지역 간의 격차를 더욱 확대시켰다.¹⁰⁵⁾

21세기 들어서면서 지역격차 문제는 더 이상 지나치기 어려운 문제가 되었다. 중국정부는 1990년대 말 서부대개발(西部大開發) 계획을 추진하였고 동북지방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개혁개방 이전 동북지역은 공업기지가 가장 발달한 지역이었지만 개혁개방 이후에 연해도시 중심의 경공업위주,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중국의 경제 성장축은 동부 연해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반면에 동북3성은 중화학공업, 국유기업위주의 경제구조에서 탈피하지 못한 채 재투자마저 저조하여 기존 설비가 낙후되는 등 중국경제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경제적 지위가 크게 약화되었다.

105) Du xian, “동북개발전략을 통한 중국의 신 비즈니스 거점화전략에 대한 연구-‘五點一線연해경제벨트’ 구축전략과 長吉圖지역발전전략을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국제경영학과 석사학위 논문, 2011. p.21.

2) 동북3성 진흥계획

동북3성의 경제적 기초는 중공업이었기 때문에 국유기업의 개혁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지역경제가 중국의 고도성장에 동참하지 못하는 현상을 야기하였다. 동북3성의 국유기업은 그동안 계획경제하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성장하였기 때문에 민영화로의 구조전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였다. 기업경영과 자원배분 뿐만 아니라 경제 및 산업구조를 시장경제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변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기업의 경쟁력은 약화되었다. 또, 국유기업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경우에서 중국이 2001년에 WTO에 가입했기 때문에 농업부문이 충격을 받게 되고 더욱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었다.¹⁰⁶⁾

이로 인해 조성된 실업률의 증가와 도시 빈곤층의 확대는 사회불안의 단서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동북3성의 경제침체는 소수민족문제와 국경안보 문제에 있어 중국정부의 부담이 되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2003년 5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랴오닝성(遼寧省)을 시찰하면서 서부대개발과 동북3성 진흥을 중국 경제발전에 필요한 두 바퀴의 수레에 비유하고, 제11차 5개년계획(2006~2010년) 기간 동안 동북3성을 중국의 네 번째 경제성장의 축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하였다.¹⁰⁷⁾ 이를 위하여 동북3성의 풍부한 천연자원, 중공업 중심의 산업구조 및 물류인프라 우위 등을 활용한 전면적인 경제재건을 추진하였다.

중국이 동북3성 낙후된 중공업기지를 새로운 중공업기지로 부활시키고 동북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동북3성 진흥계획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¹⁰⁸⁾

106) 최우길, “중국 동북진흥과 창지투(長吉圖)선도구 개발계획: 그 내용과 국제정치적 함의”, 『한국동북아논총』 제57호, 2010, p.37.

107) 任明, “중국 동북3성진흥 및 중한경제협력의 새로운 구상”, 동북아연구시리즈05-0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p.7.

첫째, 중국정부는 동북3성 진흥전략은 노후화된 동북지역 중공업기반의 재활성화를 통해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베이징-톈진-허베이 지역 경제권과 더불어 중국의 경제성장을 지탱하는 원동력으로 삼으려 한다. 즉 국가전략상 지금까지의 경공업 중심의 한 경제발전 모델의 전환을 의미한다. 개혁개방 이후 경공업 주도의 성장모델은 과거 계획경제 시기의 중공업 성장모델에 대한 수정을 통해 중국경제 발전을 이끌어 낸 반면 원료, 중간재 등 중공업 제품의 가격을 낮추고, 경쟁력 없는 국산보다는 수입에 의존하게 함으로써 중공업 기반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왔다. 따라서 중국은 동북3성의 중공업 부활을 통해 원료, 제조 장치에서 최종제품 생산에 이르기까지 일괄생산, 즉 풀세트 형태의 산업기반 구축을 통해 동북지역 중공업의 잠재력을 적극 활용하려는 것이다. 이 점에서 동북3성 진흥전략은 소득 재분배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목표로 한 서부대개발(西部大開發)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둘째, 동북3성 진흥전략은 이미 형성된 기존 국유경제 체제를 개혁한다는 점에서 기타 경제권의 개혁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즉 주강삼각주, 장강삼각주 등 지역이 경제특구의 지정을 통한 비국유(민간)부문의 신규투자를 중심으로 개혁을 추진하였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이처럼 개혁개방 초기 중국의 경제개혁은 주로 비국유경제의 성장을 우선적으로 추진한 후 내부적 체제모순을 개혁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민간경제의 양적 팽창이 질적 경제체제 개혁을 이끌어 냈다. 그러나 동북3성에 이미 국유경제 체제가 정착되어 비국유 경제부문의 진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유기업 구조조정과 소유제 개혁을 통한 국유경제 부문의 개혁이 동북3성 진흥전략 성공여부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동북3성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국, 북한, 러시아, 일본 등 동북아 국가들과의 전략적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들

108) 신호윤, 『동북3성 진흥전략과 한·동북3성 경제협력방안』, 산업은행 경제연구소, 2008, p.1.

국가들과의 상호보완관계를 바탕으로 각 국가의 특성에 따른 특수한 협력관계 모델을 구축해 가고 있는 것이다. 먼저 한국, 일본에 대해서는 투자유치를 강화하여 자금 및 기술력 측면에서 협력관계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각 성(省)정부는 한국산업은행 등 국제적 네트워크와의 협력을 통해 매년 한국과 일본 등지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북한, 러시아, 몽골 등 국가와는 자원개발 차원의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 북한 및 러시아와의 접경지역인 중국 지린성(吉林省) 훈춘(琿春)에 3국의 자유무역지대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점에서 홍콩 및 마카오 지역, 대만 등 수출시장, 화교선진자본을 배후로 발전한 주강삼각주, 상하이(上海)의 국제적 지명도, 화교기업의 직접투자 유치에 의지해 발전한 주강삼각주와 구별된다.

동북진흥계획은 경제발전에 뚜렷한 효과를 보이고 있지만 동북지역의 경제발전수준이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베이징-톈진-허베이 경제권 등 주요 경제권과 비교할 때 아직 큰 격차가 존재한다. 또한 동북 노(老)공업기지의 사회경제발전에 일부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한다. 예를 들면 체계적, 구조적 문제와 생태적 모순에 직면해 있고, 기업개혁은 완전하지도 종합적이지도 못할 뿐 아니라 개별기업의 부담 과중과 잉여노동력 과다 등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진일보한 동북진흥의 추진이 필요하고 국가가 정책적으로 더 강력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 중국 정부는 2009년 9월 9일 ‘동북 등 노후 공업기지 진흥전략의 진일보 실시에 관한 의견’(關於進一步實施東北等老工業基地振興戰略的若幹意見)을 공포하고 새로운 형세하의 진일보한 동북지역 등 노공업기지 진흥전략을 전면적으로 배치했다.

2. 두만강 하류지역 개발촉진

1) 두만강 하류지역개발

1990년과 1991년 연속하여 중국의 창춘(長春)에서 중국아시아태평양 연구회(API), 유엔개발계획(UNDP)과 미국동서양연구센터(EWC)가 공동으로 주최 하에 “동북아지역 경제기술 발전과 지역협력 국제학술토론회”를 개최하였는데 이 연구토론회에서 중국의 전문가와 학자들이 두만강지역개발프로젝트를 제일 먼저 제기하였다.¹⁰⁹⁾

1991년 10월 24일, UNDP는 뉴욕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두만강지역개발프로젝트’를 정식으로 국제사회에 선포하였으며 두만강지역개발을 동북아 각국 협력의 관건적인 프로젝트로 선정하였다. 같은 해 10월 16~18일, UNDP는 북한 평양에서 개최된 동북아 6개국의 두만강지역개발 협조회의에서 중국, 북한, 러시아, 한국, 몽골 등 5개국은 두만강지역협력개발의 프로젝트에 기본적으로 공동한 인식을 가졌으며 이를 전제로 두만강지역개발프로젝트의 관리위원회(PMC)를 설립하였다. 1992년 2월, UNDP는 두만강지역개발프로젝트의 관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소집하였는데 중국, 북한, 한국, 몽골 등 4개 회원국이 참가하였으며 러시아와 일본은 옵션 신분으로 열석하였다. 이후 UNDP는 「두만강 경제개발구의 발전전략(圖們江經濟開發區發展戰略)」을 제정하여 발표하였는데, 주요한 내용은 앞으로 20년의 시간을 걸쳐 300억달러의 투자가 이 지역에 유치하여 중국, 북한, 러시아 3개국의 국경지대인 두만강 ‘3각주’를 ‘동북아의 홍콩, 로테르담과 싱가포르’로 건설한다는 것이다. UNDP 국제전문가들이 1994년에 정의를 내린 두만강지역 범위는 약 7만km²로서 중국내 연변조선족자치주 행정구역의 4.27만km², 북한의 두만강을 접근하는 함경북도 1.5만km²,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이남의 1만km²를 포함한다.¹¹⁰⁾

109) 최지해, “중국 창지투(長吉圖)지역에 대한 투자환경 분석”, 경희대학교 중국경영학전공 석사학위논문, 2011, p.8.

하지만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여파로 동북아 경제협력의 여건이 바뀌면서 TRADP(두만강지역개발계획)사업은 활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특히 TRADP 정부 간 회의의 불참, 나진·선봉지역의 대외적 위상 저하와 개발 포기, 한국기업의 나진·선봉지역에 대한 접근 불허 등 소극적인 태도는 점진적 조화방식의 한 축을 무너뜨리는 효과를 가져와 다자간 공동개발의 가능성을 멀어지게 하였다.¹¹¹⁾

2005년 창춘(長春)에서 열린 제8차 5개국위원회에서는 이 사업을 10년간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사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사업지역도 동북아 전 지역으로 확대하였다. 이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프로젝트 현실화를 위해 공동기금을 형성하고 러시아가 16만 달러, 중국이 22만 달러, 한국이 18만 달러, 몽골과 북한은 각각 2만5천 달러를 투자해 총 65만 달러의 자금을 조성하고, UNDP는 2008년까지 매년 4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참가국들은 또한 대두만강계획(GTI)을 대대적으로 지지하고 경제발전을 강화하며 특히 민영기업의 참여를 고무 격려함과 아울러 경제고문위원회를 설립하여 민간경제의 건설적인 의견이 합작파트너의 형식으로 체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¹¹²⁾

2) 창지투개발개방 선도구 촉진

지난 20년간 두만강개발계획을 둘러싸고 참여국 간의 정치·경제적 이해가 대립되어 이 지역의 발전이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 현안을 감안하고¹¹³⁾ 중국은 두만강지역개발을 보다 더 강도 높게 국가전략으로

110) 이종림, “두만강지역개발과 연변지역의 입지 및 협력방안”, 『KDI경제리뷰』 3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1, p.8.

111) 배종렬, “두만강지역개발사업의 진전과 국제협력과제”, 수은북한경제, 2009, pp.57-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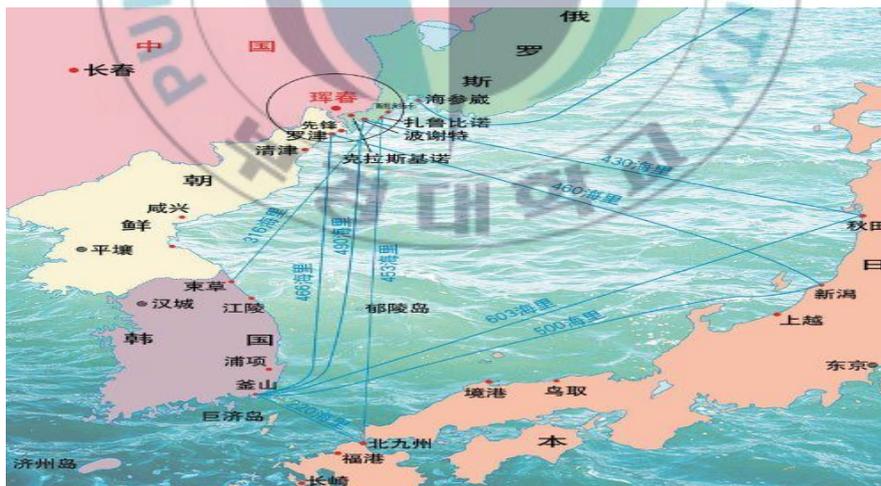
112) 전형권, “동북아 지역협력과 초국가 거버넌스의 등장-두만강유역계획(TRADP)을 중심으로”, 『정책과학연구』 16집 2호, 2006, p.107.

113) 呂弼順·金光益, “두만강개발계획과 중국의 ‘창지투(長吉圖)’개발개방 先導區”, 『국제학논총』 제16집, 계명대학교 국제연구소, 2011, p.214.

지정하고 2009년 8월30일에 ‘창지투개발개방 선도구를 위한 중국의 두만강구역합작개발계획요강(以長吉圖爲開發開放先導區的中國圖們江區域合作開發規劃綱要)’을 국가전략으로 정식 비준하였다.¹¹⁴⁾ 창지투 개발개방 선도구의 전략적 목표는 연변(沿邊)지역 개발과 개방을 위해 새로운 모델을 모색하는 것, 동북 노공업기지 진흥을 진일보 추진하는 것, 동북아 지역협력을 촉진하는 것, 지린성 사회경제발전을 가속화 하는 것이다.¹¹⁵⁾ 이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려면 북한과의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창지투와 동북지역 개발을 확보하기 위해서 북한의 항구가 필요하다. 창지투와 동북 지역개발 및 건설과정에서 항구시설 확보를 통해 해운 활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동해의 항구가 있으면 중국 연해지역이나 해외로 운송할 수 있다<그림3 참조>.

<그림 3> 라진항의 위치



자료: 百度图片; www.baidu.com (검색: 2012.9.16)

114) 吉林省政府网: 长吉图开发开放先导区特别专题

<http://www.jl.gov.cn/z t/c i t k f k f x d p>

(검색: 2012.11.8)

115) 吳昊, 閔濤, 『長吉圖先導區: 探索沿邊地區開發開放的新模式』東北亞論壇, 2010年第2期.

중국은 청나라 말기인 1860년 연해지방을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는 '베이징(北京) 조약'을 체결하면서 동해로 나가는 바닷길이 막혔다. 훈춘의 광촨(防川)에서 동해까지는 15km에 불과하지만 150여 년 동안 동해해로의 확보는 숙원으로 남아있었다.¹¹⁶⁾ 따라서 이런 면에서 중국이 북한과 러시아와의 개발협력 유인이 강하다. 또한 가까운 러시아 자르비노항이 부동항이 아니기 때문에 라진항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

예를 들어, 동북지역에 석유, 천연가스, 지하자원, 산림자원, 농축산물 등 풍부한 자원이 있다. 북한의 원정 통상구와 바로 이어지는 훈춘에도 석탄자원이 풍부하여 채굴가능 매장량이 전체 지린성의 40%이상을 차지한다. 훈춘의 석탄이나 헤이룽장성의 자원을 남방지역에 운송하기 위해서 내륙철도를 이용할 경우에는 약 15일이 걸렸다. 내륙철도 및 랴오닝성의 대련항(大連港)을 경유하여 해상운송을 할 경우에는 약 7일이 소요되었다.¹¹⁷⁾ 그런데 북한의 라진항을 통해서 운송을 할 경우 약 3~4일이 소요된다. 라진항을 이용하면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남방지역의 초과수요도 해소해 줄 수 있다. 실제로 중국은 북한 라진항 1호 부두의 사용권을 획득하고 수반되는 문제를 해결하여 국내무역 다국 운수 통로를 실현했다. 훈춘광업그룹에서 생산한 석탄이 중국해운그룹 '금박호'를 이용해 2011년 1월 11일 북한 라진항 1호 부두에서 출항하여 3일 만에 14일 상하이에 도착 했고 2011년 5월 25일에 다시 운송했다.¹¹⁸⁾

둘째, 창지투와 동북지역개발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점에서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이 필요하다.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거대한 자원과 에너지 소모가 동반하였으며, 자원과 에너지난 문제의 원만한 해결

116) “중, 나진항 통해 ‘150년 숙원 동해길’ 뚫다”, 『동아일보』 2011년 6월 10일.

117) 윤승현, 『두만강지역의 新개발 전략과 환동해권 확대 방안』, 강원발전연구원, 2009년, p.30.

118) 中國吉林網, “琿春煤炭再下江南”

http://www.chinajilin.com.cn/jlnews/content/2011-05/25/content_2239629.htm,

(검색: 2012.9.27)

여부 향후 중국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가하는 관건적인 변수이다.¹¹⁹⁾ 중국의 낮은 에너지 효율이 소비 증가를 가속화하고 있다. 통계에 따라서 중국의 투입과 산출의 유효지수는 선진국의 1/3뿐이다. 중국은 창출한 1달러 수익의 자원소비량은 미국의 4.3배, 독일과 프랑스의 7.7배, 일본의 11.5배이다.¹²⁰⁾

중국 동북지역 개발에도 직면하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는 바로 에너지의 부족이다. 그래서 창지투 지역과 동북 지역의 발전에 있어 에너지의 반입을 확대해야 한다.

북한에 매장되어 있는 유용광물 중 경제적 개발가치가 있는 광종은 40여 종이며, 이 중 마그네사이트, 중석, 물리브덴, 흑연, 중정석, 금, 운모, 형식 등 8종 광물은 세계 10위권 내의 매장량을 갖고 있으며, 철, 은, 납, 아연, 구리, 니켈, 코발트 등도 세계적인 규모의 매장량을 갖고 있다.¹²¹⁾

제2절 북한에 대한 합의

1. 경제난 완화의 필요

북한은 1946년 초에 민주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사유재산제도를 사회주의체제로 개조하였다. 같은 해 3월 5일 토지개혁에 관한 법령을 공포하여 무상몰수 무상분배에 의한 토지개혁을 실시했으며 8월 10일 공장, 광산, 철도, 체신, 은행 등 주요 산업의 국유화 법령을 공포한 데, 이어

119) 리단, “북·중 경협 강화의 실태, 특징, 그리고 합의”, 서석사회과학논총, 제1집 2호(통권 제2호),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8, p.390.

120) 中國報道周刊 <http://www.china-week.com/html/2845.htm>(검색: 2012.10.8)

121) 한국 통일부, 북한 자료실

http://unibook.unikorea.go.kr/?sub_num=51&state=view&idx=67&recom=0, (검색: 2012.6.18)

12월22일에는 지하자원, 산림 수역 등을 국유화한 사회주의화 개혁을 단행하여 계획경제추진의 기초를 구축하였다.¹²²⁾

1958년 8월 북한은 농업협동화와 수공업자의 협동화를 완료함으로써 생산수단의 소유형태가 국가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로 개조되었다. 그 결과 모든 사유재산 영역이 소멸되고 집단 국가 경영에 적합한 경제관리 제도를 형성하고 중공업우선정책 국방 경제 병행정책, 외국과의 경제협력을 제한하는 자립적 민족건설노선을 실시하였다.

자립적 민족건설노선이란 외국에 예속되지 않고 자기 국민들을 위한 경제체제와 해당 국가의 자원과 국민의 노력에 의해 자주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체제를 말한다.¹²³⁾ 북한은 농업과 경공업의 희생과 인민의 절약을 통해 중공업을 우선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이것은 북한의 경제가 왜곡된 구조를 갖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해방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북한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지만 이런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와 자립갱생의 민족경제발전노선은 심각한 경제난을 초래하였다. 북한은 국제 분업의 중요성을 소홀히 하고 폐쇄적 경제성장만 추구하는 동시에 군사비의 과다지출로 1970년대 중반이후의 경제성장은 지속적으로 둔화되었다.

북한경제난은 1980년대 후반부터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1990년대 소련을 비롯해 사회주의 시장의 붕괴는 북한의 대외경제 기반을 약화시키고 이에 따른 외화부족, 에너지난으로 인해 북한 경제의 전반적인 침체를 야기하였다. 동구권의 농업기술 및 농약 비료 등 농자재 및 생산 원료의 지원 중단과 육류 수입의 감소는 농업 관련 산업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이에 따라 식량의 자체 생산량도 감소하였을 뿐만 아

122) 현대조선문제강좌 편집위원회 편, 『북한의 경제-사회주의 조선의 경제』, 도서출판 광주, 1988, pp.54-55; 송경재, “中國과 北韓의 社會主義 經濟發展過程에 관한 比較研究 - 北韓社會主義建設의 特殊性을 中心으로”, 경기대학교 경제학과 석사학위논문, 1994, pp.59 재인용.

123) 전영호,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 서울: 615, 2006, pp.56-60.

나라 외부로부터 수입할 수 있는 능력도 약화되었다. 외화부족에 따른 외화결제의 어려움, 대외채무 상환의 불이행에 따른 대외 신용 상실로 식량 수입이 어려워졌다.¹²⁴⁾

이런 외부적 상황과 더불어 경제성장률이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되면서 북한 당국은 1995-1997년 ‘고난의 행군’시대, 1998년 ‘사회주의 강행군의 해’라는 구호를 통해 인민들의 희생과 노력을 요구했다. 이는 북한 당국 스스로 자국의 경제난을 인정한 것이었으며 또한 이 시기에 북한 당국은 국가재정의 고갈로 더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를 지탱할 경제적 역량이 사라지고 말았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1994년 이래 자연재해가 계속되었다. 북한정부에 따르면, 1994년 9월에 북한의 주요 곡창지대인 황해남도과 황해북도에서 쏟아진 우박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 식량 102만톤이 사라졌다. 그리고 1995년 여름에는 홍수로 가옥, 공장, 농경지 등 150억 달러에 이르는 재산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북한으로서는 발생한 자연재해의 피해복구를 제대로 추진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1996년 여름 다시 집중호우가 발생하였고, 1997년 여름에는 큰 가뭄까지 발생하였다. 그 시기를 전후하여 인민에 대한 식량배급과 생필품 공급의 지연과 중단이 반복되었다. 결과적으로 북한에서 식량난은 자체적 해결이 불가능 하게 되었다. 외부세력의 식량지원 및 원조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미국 등 서방권 국가들의 고립정책으로 북한의 경제사정은 3난(식량난, 에너지난, 외화난), 3저(국제경쟁력 저하, 노동의욕 저하, 기술수준 저하), 3악(제품조악, 생산환경 열악, 기계설비 낙후)의 현상이 심각하여 경제의 악순환이 거듭되었다.¹²⁵⁾

북한 당국은 주민의 대량 아사사태에 큰 충격을 받고 나서 경제와 식량난을 타개하기 위해 ‘신사고’, ‘과학중시 사상’을 내세워 중화학 공업을

124) 이금순, “대북 인도적 지원의 성과와 한계”, 『사회과학연구』, 2001, p.13.

125) 손무현, “김정일시대 ‘선군군사전략’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p.25.

육성하고 대외적 상황을 개선하여 국제사회의 원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침체된 북한 경제의 자생력 회복에 총력을 기울였다. 1999년에 거의 10년만에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되었고 그 이후 2001년까지는 완만한 플러스 성장을 유지해 오고 있다. 그러나 국민경제가 밑바닥까지 떨어져 경제규모가 1980년대 말의 절반으로 축소했던 상황에서, 여전히 국민경제의 전반적인 곤란한 상황으로부터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식량과 에너지의 심각한 부족으로 현재까지도 국민 생활이 위기 상태를 탈피하고 있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에너지 부족으로 공장 가동률과 운송 역시 회복되지 못하는 실정이다.¹²⁶⁾

북한은 이런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외국자본의 유입이 반드시 필요로 한다. 2000년대 들어 북한은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동시에 개선하고, 경제적 생존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보다는 양국 사이에서 등거리 정책을 추구해 왔다.¹²⁷⁾ 그러나 2008년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한국으로부터의 자본유입이 축소되고 불확실성은 증가되었다. 특히 2009년 제2차 핵실험으로 인하여 앞에 언급한 것처럼 북한은 국제사회와 더 단절되었고 이는 외국자본의 유입이 더 어렵게 되었다.¹²⁸⁾ 따라서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협력과 지원이 필수적이 되면서 밀착형 발전전략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2. 북방경제특구 확대의 필요

북한은 시기적으로 두 차례 경제특구개발을 추진하였다. 첫 번째는 김일성 집권기인 1991년 12월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를 지정하여 실

126) 김유호, “북한의 개혁개방정책과 중국의 역할”,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교안보학과 석사학위논문, 2012, p.40.

127) 임수호, “북·중 경제밀착의 배경과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2010, p.3.

128) 이지용, “최근 북한의 경제정책 및 북·중 경험 강화 분석”, 『주요국제문제분석』, 4월 29일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2010, p.8.

행한 바 있고, 두 번째는 김정일 집권기인 2002년 ‘신의주특별행정구’를 비롯하여 ‘금강산관광지구’ 및 ‘개성공업지구’를 경제특구로 지정 추진하였다.¹²⁹⁾

1991년 12월, 북한은 최초의 경제특구인 나진·선봉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선포하였다. 이 나진·선봉지역은 1993년부터 2010년까지 동북아시아의 국제적인 무역·금융·관광 기지로 건설하기 위해 설정한 자유경제무역지역이다. 또한 경제특구의 활성화를 위해서 1992년부터 외국인 투자법, 자유경제무역지대법 등 50여개 이상의 외자유치 관련법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외자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전반적인 개혁체제의 미비, 열악한 인프라 시설, 대외적 개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의 미흡, 에너지 공급의 불안정 등의 요인으로 그 성과는 매우 부진하였고 사실상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¹³⁰⁾

2002년 9월 발표된 신의주 행정특구는 북한에 일찍이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특구로서, 입법, 사법, 행정 등의 분야에서 중앙정부로부터 분리된 독립적인 특별행정지구의 지위를 부여 받았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이 지역을 국제적인 금융, 무역, 상업, 공업, 첨단과학, 관광지구로 발전시킬 것을 목표로 하였다. 신의주 행정특구는 오지에 설립한 나진·선봉 경제특구와 달리 인구가 밀집된 기존의 주요 공업도시를 특구로 지정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에 북한 개방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였다. 그러나 행정특구장관에 임명된 네덜란드 국적의 중국 화교 양빈(楊斌)이 비리혐의로 중국 당국에 전격 체포되면서 신의주 행정특구는 얼마가지 못해 중단되고 말았다.¹³¹⁾

북한은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국과의 교류협력을 도모하

129) 이숙자, “최근 북한의 경제특구 재추진: 나선경제특구를 중심으로”, 『POSRI경영경제연구』 제10권 제2호, 포스코경영연구소, 2010, p.206.

130) 박형준, “체제위기상황에서 북한의 경제관리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정치법학전문박사학위논문, 2009, p.169.

131) 조명철, “북한 경제특구정책의 교훈과 정책과제-나선 선봉 및 신의주 경제특구정책을 중심으로”, 『KIEP오늘의 세계경제』 제 07-42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pp.8-9.

는 과정에서 개성공업단지와 금강산관광지구를 특구로 지정하였다. 즉 북한은 2002년 11월 개성지역을 특혜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지역으로 지정하고 ‘개성공업지구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남한과 해외동포를 중심으로 한 투자당사자의 범위, 투자자의 권리, 신변보호 등을 규정하는 것 외에 50년의 토지이용기간, 등 특구의 출입절차, 노동력의 사용, 외화 반출입, 세금 및 분쟁해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2002년 11월 13일 ‘금강산 관광지구법’을 제정하면서 금강산지구를 관광특구로 지정하였다. 금강산 관광지구는 도로와 항구 및 통신 등 관광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사회 간접자본을 현대건설과 현대상선 등 개발사업자와 투자계약으로 개발하였다. 이미 1998년 11월부터 개시된 금강산 관광은 2003년 육로관광의 개시로 더욱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대북강경정책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북한이 남한을 대상으로 지정한 두 곳의 경제특구도 크게 위축되었다. 개성공단은 북한의 2008년 12.1조치 이후, 체류제한, 통행차단, 근로자 억류, 계약무효화선언 등으로 존폐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또한 금강산 관광은 2008년 7월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중단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다.¹³²⁾

2009년 8월 중국이 창지투 개발계획을 공식 비준에 이어 같은 해 12월에 김정일은 18년만에 처음으로 직접 나선지역을 방문하여 나선시를 ‘특별시’로 승격시켰으며 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외시장의 확대를 주목한 바 있다.¹³³⁾

2001년 6월초 조선 최고인민회의에서 황금평과 위화도특구를 설립한다고 선포하였다. 이어서 6월 8일, 9일에 중국정부와 함께 황금평경제구와 나선경제특구를 공동개발로 선포하였다. 북·중간의 나선 경제무역지

132) 이숙자, “최근 북한의 경제특구 재추진: 나선경제특구를 중심으로”, 『POSRI경영경제연구』 제10권 제2호, 포스코경영연구소, 2010, p.208.

133) 왕유리, “탈냉전기 북·중 경제협력 정책 조정에 대한 연구-본격추진기 경험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국제학과 석사학위논문, 2011, p.55.

대와 황금평 경제지대 공동개발 계획의 요강에 따르면, 황금평을 4개 독립적인 특구로 개발하여 정보산업, 관광산업, 현대시설농업, 공업가공을 육성할 계획이다.¹³⁴⁾ 그리고 착공한 라선 경제무역지대 총계획에 따르면 나선에 기초시설, 산업클러스트, 물류인터넷, 관광합작개발과 건설을 중심으로 원자재 공업, 장비공업, 첨단기술공업, 경공업, 서비스업, 현대고효율농업 등 6대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조선선진제조업기지, 동북아지역 국제물류중심 및 구역성관광중심을 목표로 삼았다.¹³⁵⁾

2012년 8월 14일 ‘북·중공동개발과 공동관리황금평경제구관리위원회(中朝共同開發和共同管理黃金坪經濟區管委會)’가 북경에서 성립되었다. 관리위원회는 양국정부 공동으로 설립과 임명의 기구로서 경제구의 권력 기구이며, 경제특구에 대해 동일한 영도와 관리를 한다. 구성인원은 중국사람이 관리위원회 주임을 담당하고 부주임 네 명이 북·중 양국 각 두 명을 파견하기로 한다.¹³⁶⁾ 9월 15일에 현지에서 황금평 경제특구 관리위원회의 청사 착공식이 개최되었다.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은 전체 면적이 14.4km²에 달하는 방대한 황금평 특구의 일부인 1.6km² 규모의 우선 개발구역이다. 황금평을 단계적으로 개발하기로 한 북·중은 이곳을 '초기 시작구역'으로 명명하고 특구 관리위 청사와 세관, 교역센터, 표준 공장건물, 보세창고 등을 지을 예정이다.¹³⁷⁾

10월 17일 관리위원회가 정식적으로 황금평·위화도 경제특구 관리위 직원 모집하게 하였다. 모집 분야는 금융, 투자유치, 도시기획·관리, 전

134) 國際財經日報: 朝鮮效仿中國 建立黃金坪經濟開發區.
<http://cn.ibtimes.com/articles/5653/20110609/north-korea-china-hwanggumpyong.htm>
 (검색: 2012.12.26)

135) 中國新聞網: 中朝共同開發羅先經貿區 將成為朝鮮先進製造業基地
<http://www.chinanews.com/gn/2012/02-05/3645358.shtml>
 (검색: 2012.12.29)

136) 新浪財經: 中朝黃金坪經濟區探秘: 曾被外媒誤讀為租界
<http://finance.sina.com.cn/china/20121127/003913802329.shtml>
 (검색: 2012.12.30)

137) 연합뉴스: 북·중 황금평 우선 개발구역 공사 한창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5991782>
 (검색: 2013.1.2)

력관리, 환경관리, 세무, 법률 등이며 최종 합격자에게는 중국 준공무원에 해당하는 임금과 사회보장이 제공된다.¹³⁸⁾



138) 아시아투데이: 북한, 중국 황금평 단계적 개발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733133>
(검색: 2013.1.2)

제5장 결론

탈냉전기에 들어 북·중경제협력과정은 침체기, 조정기, 추진기 등 3단계로 나누어진다. 첫째, 침체기는 북·중간에 정치적인 불신과 상호의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경협이 침체되었다. 둘째, 조정기는 양국간 정치관계의 개선으로 인하여 관계를 회복함에 따라 경협의 중요성에 대한 공동인식으로 경협이 점차 확대되었다. 그러나 양국은 경협의 중요성에 대한 공동인식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보다 형식적인 중요성과 협력의도만 강조하였다. 셋째, 추진기는 북·중 간의 정치적 불신과 갈등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경협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강조는 이전 어느 시기보다 강해졌다.

북·중경협의 현황을 보면, 첫째, 무역 측면에서 2000년에 양국의 무역규모는 4.9억 달러로 1990년의 수준을 회복하였고 2003년 10억 달러를 돌파하였고 2005년에는 15억 달러를 넘어섰다. 2010년에는 무역액이 34억 달러로 이르렀다. 그 중 동북 3성은 지리적으로 북한과 접하고 북·중무역의 여러 유형 중에서 변경무역과 보세무역의 이점을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북·중무역에서 높은 비중인 70%를 점하고 있다. 무역증가에 따라서 북한의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는 큰 폭으로 확대되어 2010년에 적자액은 10억 달러에 이르렀다. 또한, 북·중 교역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북한의 대중무역의존도도 급격히 심화되고 있어 2010년에는 83.0%로 역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거래한 상품을 보면 북한의 대중국 주요 수출품이 주요 광물성연료·에너지, 어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의 대중국 주요 수입품은 주요 광물성연료·에너지, 보일러·기계류, 전기기기·TV·VTR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투자 측면에서 중국은 대북투자의 초기 단계에는 규모가 작고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식당, 상점, 오락 등의 업종에 국한되었다. 7.1경

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에서는 공장·기업소의 독립채산제가 확립되고 시장화가 진행되면서 2004년부터 중국의 대북투자는 증가되었고, 점차 서비스, 자원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으로 대북투자의 영역을 다변화시켜 나가고 있다.

셋째, 중국의 대북지원 측면에서 탈냉전기에 중국이 지속적으로 북한에게 중요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해 왔지만 아직까지 대북 지원의 정확한 통계는 파악하기 어렵다. 북·중관계가 긴밀해지면서 북한은 중국에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고 중국은 북한을 자국의 영향권 아래 두기 위해서 대북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중이다.

북한은 남북한 간의 합의, 국제사회의 요구를 무시하고 우방인 중국의 설득과 만류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중국은 제2차 핵실험을 강행하는 북한에 대하여 역사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비판을 하면서 유엔의 대북제재결의안에 동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중 경협은 오히려 급속한 발전이 이루어졌다.

북·중간의 경제협력 강화는 양측의 정치적인 합의와 경제적 합의가 병존한다. 중국의 입장으로 보면 첫째, 정치적 요인으로는 중국이 한반도의 안정유지와 영향력 확대를 통해 자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 추구하고 한반도에서 영향력 확대를 통해서 동북아 역내에서 '책임 있는 대국'의 국가 이미지와 역할 수립과 국제적 지위 증대라는 자국의 전략목표를 추구할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한다.

둘째, 경제적으로는 중국이 동부연해 중심의 경제개발로 인한 지역불균형과 소득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낙후된 동북3성 개발을 국가적 사업으로 정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며, 창지투 개발개방 선도구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항구와 자원을 고려하고 북한과 협력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북한의 입장으로 보면 첫째, 정치적인 요인으로는 북한이 핵문제로 인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제재로 인해 직면된 고립적인 상황의 탈출 및

체제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한다.

둘째, 경제적 요인으로는 북한이 자력으로 경제회생이 힘든 상황에서 외국자본의 유입이 필요하지만 중국 외엔 도움을 받을 수 없으며, 또 중국과의 연계개발을 통해서 인프라를 포함한 투자환경을 개선하여 동북아 물류 거점으로 육성하며 경제 발전의 동력을 도모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단행본:

- 김성철, 2007, 『일본 외교와 동북아』, 서울: 한울.
- 민신 페이지(지음), 황성돈(옮김), 2011, 『불확실한 중국의 미래』, 경기도 고양시: 책미래.
- 문대근, 2009, 『한반도 통일과 중국: 과거·현재·미래의 한중관계』 서울: 늘품플러스.
- 손상하 역, 2005, 『등소평과 21세기 중국의 전략』 서울: 유스북.
- 이종석, 2000, 『북한-중국 관계 1945~2000』 서울: 중심.
- 이창형 외, 2008, 『중국이나 미국이나』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 전성홍·이종화, 2008, 『중국의 부상, 동아시아 및 한중관계에의 함의』 서울: 오름.
- 전영호, 2006,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 서울: 615.
- 조영남, 2009, 『21세기 중국의 가는 길』 파주: 나남.
- 진창수, 2008, 『일본 정세 전망』, 서울: 세종연구소.

논문:

- 김주삼, 2011, “북·중 경제협력관계 변화와 한반도 통일 환경 분석”, 동북아연구.
- 김지동, 2010, “중국의 패권전략과 한국의 대응 연구”,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진홍, 2008, “대만 신정권의 대중국 관계개선 정책과 향후 전망”, 『해외경제정보』 43호, 서울: 한국은행.

- 김유호, 2012, “북한의 개혁개방정책과 중국의 역할”,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교안보학과 석사학위논문.
- 리단, 2008, “북·중 경협 강화의 실태, 특징, 그리고 함의”, 서석사회과학논총, 제1집 2호(통권 제2호),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呂弼順·金光益, 2011, “두만강개발계획과 중국의 ‘창지투(長吉圖)’개발개방 先導區”, 『국제학논총』 제16집, 계명대학교 국제연구소.
- 任明, 2005, “중국 동북3성진흥 및 중한경제협력의 새로운 구상”, 동북아연구 시리즈05-0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배종렬, 2009, “두만강지역개발사업의 진전과 국제협력과제”, 수은북한경제.
- 박형준, 2009, “체제위기상황에서 북한의 경제관리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정치법학전공 박사학위논문.
- Du xian, 2011, “동북개발전략을 통한 중국의 신 비즈니스 거점화전략에 대한 연구 - ‘五點一線연해경제벨트’ 구축전략과 長吉圖지역발전전략을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상진, 2008, “북·중 정치외교 관계: 실리에 기초한 전략적 협력 관계”, 『북한-중국 간 경제사회 네트워크 형성과 변동』,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 통일학세미나 자료집.
- 신호윤, 2008, 『동북3성 진흥전략과 한·동북3성 경제협력방안』, 산업은행 경제연구소.
- 심명성, 2012, “중국의 변화가 동북아 세력구도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국제정치학 전공 석사학위논문.
- 손무현, 2009, “김정일시대 ‘선군군사전략’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경재, 1994, “中國과 北韓의 社會主義 經濟發展過程에 관한 比較研究- 北韓 社會主義建設의 特殊性을 中心으로”,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운철, 2006, “중국의 대북한 경제협력 증가의 정치경제적 함의”, 『정세와 정책』, 세종연구소.
- 왕유리, 2011, “탈냉전기 북·중 경제협력 정책 조정에 대한 연구-본격추진기 협력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유석렬, 2010, “국제사회의 반응과 대응책”, 『북한』 5월호, 북한연구소.
- 월터 클레멘스(Walter C. Clemens), 2010, 『북한을 함의에 이르게 하는 전략』, 서울: 한울 아카데미.
- 이금순, 2001, “대북 인도적 지원의 성과와 한계”, 『사회과학연구』,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이계란, 2010, “후진타오 정부의 대북정책: 북 핵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26권 제4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이상숙, 2011, “중국의 대외전략 변화와 한반도 정책”, 2011년도 한국국제정치학회 안보국방학술회의.
- 이수, 2008, “한중 수교 이후 북·중 관계-중국의 시각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국제정치전공 석사학위논문.
- 임수호, 2010, “북·중 경제밀착 배경과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 이숙자, 2010, “최근 북한의 경제특구 재추진: 나선경제특구를 중심으로”, 『POSRI경영경제연구』 제10권제2호, 포스코경영연구소.
- 이영종, 2012, “북한 후계체제와 권력승계에 관한 연구: 김정은 후계권력 구축과 안정성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행정언론대학원 외교안보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영훈, 2006, “북·중무역의 현황과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 이원경, 2011, “최근 중국의 대북 투자 현황”, 『KDI 북한경제리뷰』 3월호, 한국개발연구원.
- 이정철, 2006, “북·중 경제협력관계의 변화: 현황과 함의”, 『중국이슈리포트』, 삼성경제연구소.
- 이종립, 2011, “두만강지역개발과 연변지역의 입지 및 협력방안”, 『KDI경제리뷰』 3월호, 한국개발연구원.
- 이지용, 2010, “최근 북한의 경제정책 및 북·중 경협 강화 분석”, 『주요국제문제분석』,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 이주형, 2010, “중국의 대日 인식과 中日關係”, 『대한정치학회보』 17집 3호, 대한정치학회.
- 이평규, 2011, “대북제재의 전개과정과 효과성 연구”,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문.

- 윤병수·동애경, 2010, “북·중 경제협력의 심화가 남북경협에 미치는 파급영향과 시사점”, 『금융연구시리즈』 제3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윤승현, 2009, 『두만강지역의 新개발 전략과 환동해권 확대 방안』, 강원발전연구원.
- 장단, 2012, “북한무역의 대중 의존성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명철 외, 2005,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조명철, 2007, “북한 경제특구정책의 교훈과 정책과제-나선 선봉 및 신의주 경제특구정책을 중심으로”, 『KIEP오늘의 세계경제』 제07-42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조명철, 2010, “중국의 대북한 경제협력 변화와 전망”, 대외경제연구원.
- 조준성, 2011, “韓國의 對北政策變動要因에 관한 研究: 北核問題를 중심으로”, 경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전병근, 2008, “冷戰结束后中国的韩半島政策”, 『중국연구』 제44권,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중국연구소.
- 전우형, 2010, “일본의 대북교역 차단, 실질적인 효과는” 북한경제정보.
- 전형권, 2006, “동북아지역협력과 초국가 거버넌스의 등장 - 두만강유역계획 (TRADP)을 중심으로”, 『정책과학연구』 16집 2호,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 전형준, 2011, “북핵 문제의 실체와 한·미의 대응 전략”, 대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귀화, 2011,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과 북핵문제”, 『지역발전연구』 제11권 제1호, 한국지역발전학회.
- 정도엽, 2011, “동북아 정세변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안보전략 모색”, 동국대학교석사학위논문.
- 정영철, 2011, “21세기 중국의 동아시아 패권전략과 한반도적 함의”, 한남대학교 정치 및 지역개발학과 박사학위논문.

- 짱위엔, 2012, “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입장변화 분석”, 경북대학교 정치학과 국제정치전공 석사학위논문.
- 최수영, 2010, “북·중경제관계와 남북경협에 대한 대북 파급효과 비교분석”, 『KINU 연구총서 10-13』 제12호, 통일연구원.
- 최우길, 2010, “중국 동북진흥과 창지투(長吉圖)선도구 개발계획: 그 내용과 국제정치적 함의”, 『한국동북아논총』 제57호, 한국동북아학회.
- 최지해, 2011, “중국 창지투(長吉圖)지역에 대한 투자환경 분석”, 경희대학교 중국경영학전공 석사학위논문.
- 하상식, 2011, “중국의 대한반도 전략적 이해관계”, 『전략연구』 통권 제51호, 한국전략연구소.
- 현인택, 2006, “새로운 한중협력 시대를 위하여: 외교·안보적 측면”, 『국제관계연구』 제10권 2호, 서울: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기타:

- 아시아투데이
 연합뉴스
 중앙일보
 한국 통일부, 북한 자료실

2. 국외문헌

논문:

- 林今淑, 2009, “中朝贸易的现状及对策研究”, 『延边大学学报(社会科学版)』 第42卷 第一期.
- 吴德烈, 2008, “中朝经贸合作的机遇与发展思路”, 『亚非纵横』, 第1期.
- 朴建一, 2011, “承前启后的中朝经济合作关系”, 『亚太地区发展报告』, 제1판, 中国社会科学院亚州太平洋研究所.

- 赵传君, 孙永, 2006, “加强中朝经贸合作的战略思考”, 『求是学刊』 第2期.
- 陈龙山, 2006, “中朝经济合作对朝鲜经济的影响”, 『当代亚太』 第1期.
- 于广义, 2008, “中朝经贸合作的现状、问题及对策”, 『党政干部学刊』 第5期.
- 廖小娟, 2005, “中共与北韓的双边关系: 以两次核武危机的处理检视”, 『展望与探索』 第3卷 第5期.
- 吴昊, 闫涛, 2010, “长吉图先导区: 探索沿边地区开发开放的新模式”, 『东北亚论坛』 第2期.
- Paul B. Stares and Joel S. Wit. 2009, “Preparing for Sudden Change in North-Korea”, Council Special Report, No. 42.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Jan.

기타:

- 吉林省政府网
新华网
网易
搜狐
百度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中国吉林网
中国报道周刊
中国新闻网
国际财经日报
新浪财经

